

YTN 연구용역보고

YTN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공적책임·공정성 진단

2026. 1. 26

한국방송학회

• • 연구 기관
한국방송학회

•• 연 구 진
책임연구원 : 임정수(서울여자대학교 언론영상학부 교수)
공동연구원 : 강혜원(한림대학교 미디어스쿨 교수)

발 행 일 : 2026년 1월

발 행 처 : 한국방송학회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용역 수행자의 의견으로 YTN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다를수 있습니다.

제 출 문

정재훈 대표이사 직무대행 귀하

본 보고서를 “YTN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공적책임·공정성 진단”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6년 1월

(사)한국방송학회

책임연구원 : 임정수

공동연구원 : 강혜원

요약문

1. 연구 필요성

보도전문채널 YTN은 보도 프로그램을 통해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전제로 방송사업권을 부여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정기적인 재승인 절차를 통해 공적책임과 공정성 이행 여부에 대한 평가를 받아 왔다. 보도전문채널은 일반 방송에 비해 뉴스 비중과 사회적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보도의 공정성은 단순한 편집 원칙을 넘어 시민의 공적 판단과 민주적 의사결정의 신뢰도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최근 정치·경제·국제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보도 경쟁의 심화는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재승인 심사 또한 형식적 기준을 넘어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을 요구받고 있다. 외부 독립 연구기관에 의한 공정성 진단은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여 재승인 판단의 객관성과 설명 가능성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한다.

2025년은 비상계엄 선포, 대통령 탄핵과 구속, 조기 대선, 사회적 갈등의 심화 등 국내 정치의 격변과 함께 국제 통상 질서의 변화가 중첩된 해였다. 이러한 환경에서 보도전문채널은 사실의 정확한 전달을 넘어 쟁점을 구조화하고 공론장을 형성하는 공적 역할을 요구받았다. YTN은 정치·사회적 긴장 국면에서 주요 갈등과 제도적 해결 과정을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대선 과정에서는 사실 검증과 정책 중심 보도를 통해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해야 하는 책무를 지녔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 속에서 2025년 YTN 보도·시사 프로그램이 공정성과 공적책임의 원칙에 부합했는지를 실증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보도전문채널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다.

2. 이론적 논의

이 연구는 보도전문채널 재승인 절차의 일부로서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공적책임과 공정성을 진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관련 법제와 학술적 논의를 이론적 토대로 삼는다. 특히 공적책임과 공정성은 학문적 논의나 사회적 요구와 분리된 개념이 아니라, 다양한 논의를 거쳐 입법화된 방송법 규정을 통해 공식화된 사회적 합의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보도전문채널의 공적책임을 규정한 추상적 논의보다 현행 방송법이 공적책임과 공정성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한다.

방송법 제5조는 방송의 공적책임을 인간의 존엄과 민주적 기본질서의 존중,

국민 화합과 여론 형성 기여, 사회적 해악 방지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공영·민영, 지상파·유료방송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방송에 공히 적용된다. 보도전문채널에 특화된 별도의 공적책임 조항은 존재하지 않지만,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수행하는 채널 역시 동일한 공적책임을 부담한다. 이 조항들은 ‘하여야 한다’는 작위의무와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부작위의무를 병기함으로써, 방송이 수행해야 할 적극적 책무와 동시에 넘어서서는 안 될 한계를 함께 제시하고 있다.

방송의 공적책임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로는 공익성, 공정성, 다양성이 학술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이 가운데 공익성은 시청자 권익 보호와 사회 공동의 이익에 대한 기여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방송법 제6조에서 공정성과 함께 보다 구체적인 실천 기준으로 제시된다. 공정성은 민주적 여론 형성을 위한 핵심 원칙으로서 진실성, 객관성, 균형성의 확보를 요구하며, 다양성은 사회적·문화적 다양한 관점과 취약계층의 목소리가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책임을 의미한다. 방송법은 이들 개념을 분리하거나 병렬적으로 다루면서, 방송이 지향해야 할 가치 체계를 제도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공정성과 관련하여 방송법 제6조는 특히 보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명확히 규정하고, 정치적 쟁점이나 정책 보도에서 의견이 다른 집단에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균형성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 역시 공정성을 편향되지 않은 의견 전달, 객관성을 사실 왜곡 없는 정확한 보도, 균형성을 실질적 기회균등의 제공으로 해석하며, 단순한 양적 균등이 아닌 사안의 성격과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한 판단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사법적 해석은 시사·보도 프로그램에서 공정성이 단순한 형식 요건이 아니라 실질적 판단 기준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여 본 연구는 YTN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공정성 진단을 위한 분석틀을 양적 공정성, 질적 공정성, 투명성의 세 차원으로 설정하였다. 양적 공정성은 정치적 성향의 수적 균형뿐 아니라, 보도 영역 구성, 출연자 구성, 사회적 취약계층의 반영 등 다양한 요소의 균형성과 다양성을 포함했다. 질적 공정성은 정치적 진보와 보수의 편향성을 판단하기보다는 정보/지식 제공 방식과 의견/판단 제시 방식 중에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를 진단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 투명성은 취재원과 정보 출처, 통계와 여론조사의 과학적 설명 여부 등을 통해 보도의 신뢰성과 공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핵심 요소로 제시되었다. 본 연구는 이 세 요소를 통해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공적책임과 공정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자 했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보도전문채널 YTN의 공정성 수행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2025년 한 해 동안 방송된 뉴스 및 시사교양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양적·질적 분석을 병행한 다각적 연구설계를 적용하였다. 분석 대상은 프라임타임 뉴스 프로그램과 시사교양 프로그램으로 구분되며, 뉴스 보도의 구조적 특성과 시사 프로그램의 심층성을 모두 고려해 상이한 분석 전략을 채택하였다.

보도 부문에서는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방송된 YTN의 대표 프라임타임 뉴스인 평일 <뉴스NIGHT>와 주말 <뉴스와이드>를 대상으로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전체 기간을 분기별로 나눈 뒤 각 분기를 대표하는 월(2월, 5월, 8월, 11월)을 선정하고, 주중과 주말을 균형 있게 포함하는 체계적 표본추출 방식을 적용하였다. 분석 자료는 YTN 공식 웹사이트에 게시된 뉴스 스크립트를 기반으로 하되, 실제 방송 영상과의 교차 검증을 통해 텍스트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최종 분석 대상은 총 720건의 뉴스 보도로, 보도 유형, 아이템 주제, 뉴스 제시 방식, 취재원 구성, 외부인 대담의 균형성 등을 중심으로 공정성을 다각도로 진단하였다. 특히 국내 정치 및 제21대 대통령 선거 관련 보도에 대해서는 편향성, 시간 배분의 적정성, 앵커 논조 등을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시사교양 부문에서는 YTN의 <팩트추적>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팩트추적>은 회차별로 단일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루는 프로그램 특성을 지니고 있어, 표본추출 대신 2025년 방영분 중 결방 회차와 동영상이 비공개된 한 회차를 제외한 총 38회를 모두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양적 내용분석을 통해 주제 영역 분포, 정치적 편향성, 사회적 취약·취향계층 이슈 반영 여부, 문제 제기 및 해결 중심 프레임 등을 평가하였다. 아울러 양적 분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저널리즘·방송학·방송산업정책·문화비평·시나리오·다큐멘터리 분야 전문가 6인을 대상으로 서면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여 프로그램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에 대한 질적 평가 및 개선 방향을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방법을 통해 본 연구는 뉴스 보도와 시사교양 프로그램을 포괄하는 YTN의 공정성 수행 양상을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통계적 결과와 해석적 논의를 결합한 종합적 평가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4. 분석결과

본 연구의 분석은 보도전문채널 YTN이 공적 책임과 보도 공정성을 어떻게

수행했는지를 다각적으로 점검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특히 보도 부문과 시사 교양 부문을 대상으로 양적·질적 공정성, 투명성, 선거보도의 공정성, 그리고 사회적 취약계층 보도의 적절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뉴스 아 이템 내용 분석과 함께 외부 전문가 심층 평가를 병행하여, 수치 중심의 분석 을 넘어 해석적·규범적 평가를 시도하였다.

□ 보도 부문의 양적·질적 공정성 평가

보도 부문의 양적 분석 결과, 전체 뉴스 아이템은 다양한 이슈를 골고루 다루는 것으로 보였다. 국내정치 보도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는 대통령 탄핵과 대선 국면이라는 당시 정치적 환경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월별 분석에서도 정치 일정과 주요 사회적 사건에 따라 뉴스 주제가 탄력적으로 변화하는 양상이 확인되었으며, 특정 시기에 단일 이슈가 과도하게 편중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다만 노동, 환경, 복지, 교육 등 일부 공공적 의제가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했다는 점에서는 향후 보도 균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외부인 초청 대담의 출연자 구성에서는 여야 정치권과 전문가가 비교적 고르게 포함되었으나, 성별과 장애 유무 측면에서의 다양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연자의 대다수가 남성이었고, 장애인 출연자는 없었다. 이는 정치적 균형과는 별개로, 방송뉴스가 사회 구성원의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향후 출연자 섭외 기준에 대한 적극적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다.

질적 공정성 분석에서는 뉴스 구성 방식과 논조의 중립성이 전반적으로 잘 유지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대부분의 뉴스는 사건 설명과 분석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기자의 주관적 논평이 개입된 사례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정치 아 이템의 경우에도 정부·여당 또는 야당·야권에 명확히 유리하거나 불리한 논조 보다는, 유불리 판단이 어려운 중립적 보도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외부인 초청 대담에서 앵커의 논조 역시 객관적 정보 전달에 머무른 것으로 분석되어, 진행자의 역할이 과도한 의견 개진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 취재원 활용의 투명성과 신뢰성

취재원 제시 방식에 대한 분석결과, 전체 뉴스의 상당수가 실명 또는 기관 명시 등 투명한 취재원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익명 취재원이나 취재원 미제시 사례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는 보도 신뢰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점이다. 투명한 취재원 유형으로는 정부 기관, 검찰, 경찰, 정당, 전문가, 시민사회 단체 등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으며, 특정 정당이나 기관에 대한 과도한 할당은 확인되지 않았다.

□ 선거보도의 공정성 평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관련 보도 분석 결과, 선거유세 스케치, 정책·공약 분석, 판세 분석, TV토론 등 다양한 유형의 아이템이 포함되어 있었다. 프로그램별로는 스트레이트 뉴스에서는 유세 현장 중심의 보도가, 시사 성격이 강한 프로그램에서는 정책·공약 분석 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선거보도의 시간 배분에서는 여야 간 비중 차이가 미세하게 존재했으나, 내용 편향성 분석에서는 특정 정당에 명확히 유리하거나 불리하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보도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이는 선거 국면에서도 형식적·내용적 공정성을 일정 수준 유지하려는 노력이 작동했음을 보여준다.

□ 시사교양 프로그램 <팩트추적> 평가

시사교양 부문 분석 대상인 <팩트추적> 프로그램은 사회, 경제, 기술, 보건 등 다양한 분야의 이슈를 다루며, 단순 사건 전달을 넘어 구조적·제도적 문제를 조명하려는 기획 의도를 유지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불평등, 안전, 건강, 노동 문제 등 사회적 취약계층과 연관된 주제를 지속적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공적 책무 수행 측면의 긍정적 평가가 도출되었다.

전문가 질적 평가에서도 <팩트추적>은 아이템 선정의 적절성, 취재 과정의 절차적 공정성, 자료와 증거 제시 방식에서 비교적 높은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통계, 공문, 법령, 현장 취재, 인터뷰 등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진술과 증거의 객관성을 강화하려는 시도가 확인되었다. 다만 반론권 보장, 이해당사자의 목소리 확보, 핵심 주장에 대한 교차 검증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었다.

취약계층 보도와 관련해서는, 이들을 단순한 피해자로 재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권리와 구조적 원인을 함께 조명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은 주목할 만하다. 또한 팩트 확인에 그치지 않고, 후속 추적과 정책 이행 점검까지 이어지는 지속적 검증 구조가 마련될 필요성도 강조되었다.

□ 종합 평가 및 시사점

종합적으로 볼 때, YTN은 정치적 격변기에도 보도전문채널로서 요구되는

기본적인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을 비교적 충실히 유지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뉴스 제작 과정에서의 주관적 개입 최소화, 정치 아이템의 중립적 구성, 취재원 투명성 확보는 긍정적인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동시에 출연자 구성의 사회적 다양성 확대, 비정치적 공공 의제의 비중 강화, 시사교양 프로그램의 후속 검증 기능 강화 등은 향후 공적책임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보완되어야 할 과제로 제시된다.

본 연구는 보도전문채널의 공정성을 단순한 정파적 균형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다양성, 취재 절차의 투명성,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이라는 폭넓은 차원에서 재조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는 향후 보도전문채널의 평가 기준과 제도 개선 논의에 있어 실증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5. 결론: 분석결과와 함의와 공정성 개선방안

□ 공정성 진단 분석틀 제공의 의미

본 연구는 YTN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공적책임 수행을 체계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양적 공정성, 질적 공정성, 투명성을 핵심 축으로 하는 공정성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이 분석틀은 공정성을 정치적 성향의 단순한 균형 여부로 한정하지 않고, 보도 영역과 주제의 배분, 출연자 구성, 소수자와 취약계층의 반영 여부 등 보도의 구조적 특성을 포괄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양적 공정성은 보도량의 균형을 넘어 뉴스가 어떤 사회적 영역과 가치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지를 진단하는 지표로 활용되었으며, 질적 공정성은 사실 전달과 해석·평가의 경계, 정보와 의견의 구분 여부 등을 중심으로 보도의 내용적 균형과 성격을 점검하는 기준으로 설정되었다. 여기에 더해 투명성은 취재원 공개, 정보 출처 및 조사 방식의 명시 여부 등 보도의 신뢰성과 직결되는 요소로서 분석틀의 핵심요소로 포함되었다.

본 연구는 방송법이 규정한 공적책임과 공정성을 이론적 준거로 삼아,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공정성이 단일 기준으로 환원될 수 없으며 객관성, 균형성, 다양성, 투명성이라는 복합적 요소의 결합을 통해 구현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특히 공정성은 단순한 양적 균등을 넘어 사안의 맥락과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한 실질적 균형을 의미하며, 질적 공정성과 투명성은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보도의 신뢰성과 공적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조건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의 분석틀은 2025년 보도의 성과를 평가하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향후 보도전문채널이 공정성과 공적책임을 제도화하고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실천적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

가 있다.

□ 공정성 분석결과의 의미

공정성 분석결과, YTN 보도 및 시사교양 프로그램은 정치적 중립성과 취재 투명성 측면에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 관련 뉴스와 21대 대선 보도에서 명시적인 정파성을 배제하고 형식적 중립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확인되었으며, 취재원 공개와 정보 출처 명시 등 투명성 지표 역시 전반적으로 우수한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는 정치·사회적 긴장이 고조된 상황 속에서도 보도전문채널이 기본적인 정확성과 균형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지속해 왔음을 보여준다.

공정성의 또 다른 핵심 요소인 다양성과 질적 균형 측면에서는 구조적인 한계가 드러나기도 했다. 양적 공정성 분석 결과, 전체 뉴스 아이템에서 국내 정치 보도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 반면, 지역, 복지, 환경 등 사회적 가치와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아이템의 비중은 낮은 수준에 그쳤다. 또한 외부인 대담 출연자의 성별이 남성에 편중되어 있었고, 분석 대상 샘플에서 장애인 출연자가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포용적 다양성 측면의 부족함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시사교양 프로그램인 <팩트추적>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 취약계층을 다룬 아이템의 비중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질적 공정성 측면에서도 형식적 중립성은 유지되고 있으나, 갈등 중심의 프레임 구성과 심층보도의 부족이 한계로 지적되었다. 특히 <팩트추적>의 경우 ‘갈등 제시 중심’ 회차가 ‘문제 해결 중심’ 회차보다 약 두 배 많아, 사회적 합의 도출이나 대안 제시에 기여하는 공익적 저널리즘으로의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투명성 측면에서는 공식 권력 기관에 대한 취재 의존도가 높아, 전문가와 일반 시민, 시청자의 의견을 보다 폭넓게 반영함으로써 취재원의 다원성을 확대할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 공정성 개선방안

종합적으로 볼 때, YTN 뉴스 및 시사교양 프로그램은 정치적 중립성과 취재 투명성이라는 기본 요건은 충족하고 있으나, 출연진과 보도 주제의 다양성, 소외 계층과 지역 이슈에 대한 반영, 그리고 문제 해결 중심의 질적 보도 강화라는 과제를 통해 공정성과 공적책임을 한 단계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보도 및 시사교양 프로그램의 공정성과 공익성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 과제를 도출하였다.

- 뉴스 아이템 및 취재원 섭외의 다양성 확보

정치·권력 감시 중심의 보도 관행을 넘어 생활, 환경, 지역 이슈 등 다양한 시청자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뉴스아이템 발굴과 취재원 구성의 다변화가 필요하다.

- 형식적 중립성과 심층보도 사이의 균형 마련

사실 중심의 형식적 중립성을 유지하되, 전문가와 시민의 균형 있는 참여를 통해 사회적 갈등의 맥락과 해결 방향을 제시하는 심층보도와의 조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 취약계층 및 사회적 소수자 이익 수호

공익성과 다양성 차원에서 성별·장애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포용적 재현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의 목소리가 보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직적 고려가 요구된다.

- 시사교양 프로그램 아이템의 다원화

정치·사회 이슈에 집중된 아이템 구성에서 벗어나 경제, 문화, 기술, 의료 등 다양한 분야로 주제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 비정치적 아이템에서 형식적 균형성 강화

비정치적 주제를 다룰 경우에도 대립적 의견을 보다 균형 있게 제시하여 시청자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해야 한다.

- 시사 프로그램의 사회적 현안에 대한 대안 제시

팩트 확인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현안에 대한 개선 방안과 대안을 제시하며, 후속 보도나 연속 기획을 통해 문제 해결 지향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팩트 검증 프로토콜 제시

자료 검증, 교차 확인, 반론권 고지, 한계점 명시 등을 포함하는 표준화된 팩트 검증 프로토콜을 마련하여 프로그램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

- 시사 프로그램 논조에서 보편적 당위성의 선행
개별 쟁점에 앞서 인간의 권리와 사회적 가치 등 보편적 당위성에서 출발하는 논조를 통해 시사 프로그램의 공공성과 설득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목 차

요약문	1
I. 연구 필요성	13
II. 이론적 논의	15
1. 보도전문채널의 공적책임 논의	15
2.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공정성 논의	18
3. YTN 시사보도 프로그램 공적책임과 공정성 논의의 분석틀	22
III. 연구방법	25
1. 분석대상과 자료수집	25
1) 보도 부문	25
2) 시사 부문	26
2. 분석방법과 분석유목	28
1) 내용분석의 분석유목	28
2) 전문가 심층인터뷰	30
3. 코더교육과 코더 간 신뢰도	31
IV. 분석결과	32
1. 보도 부문	32
1) 양적 공정성	32
2) 질적 공정성	37
3) 투명성	40
4) 선거보도 공정성	42
2. 시사교양 부문	45

1) 양적 평가	45
2) 질적 평가	47
 V. 결론 : 분석결과의 함의와 공정성 개선방안	52
1. 분석결과의 함의	52
1) 공정성 진단의 분석틀 제시	52
2) 공정성 분석결과의 함의	53
2. 공정성 개선방안	54
 참고문헌	57
부록1 : 전문가 심층인터뷰 질문지	59

〈표 차례〉

〈표 1〉 방송 공정성의 하위개념에 관한 주요 논의들	21
〈표 2〉 분석대상 뉴스프로그램	25
〈표 3〉 프로그램 및 월별 분석대상 보도 수(단위: 건, %)	26
〈표 4〉 2025년에 방영된 〈팩트추적〉 프로그램 목록	27
〈표 5〉 프로그램별 뉴스 제시 방식(단위: 건, %)	29
〈표 6〉 뉴스아이템 분석방법	29
〈표 7〉 전문가 심층인터뷰 대상	30
〈표 8〉 YTN 뉴스 아이템 유형(단위: 건, %)	32
〈표 9〉 월별 YTN 뉴스 아이템(단위: 건, %)	34
〈표 10〉 출연자 유형별 분포	35
〈표 11〉 대담 출연자 성별 분포	36
〈표 12〉 대담 출연자 장애/비장애 분포	37
〈표 13〉 뉴스 내용 구성방식	37
〈표 14〉 뉴스 아이템 편향성 평가 결과	38
〈표 15〉 앵커 논조 공정성	39
〈표 16〉 출연자 논조 공정성	40
〈표 17〉 취재원 제시 형태별 비중	40
〈표 18〉 투명한 취재원 유형 분포	41
〈표 19〉 대선 관련 보도 아이템 유형	43
〈표 20〉 대선 보도 시간배분 편향성	44
〈표 21〉 대선 보도 내용 편향성	44
〈표 22〉 프로그램 주제 아이템 유형	45
〈표 23〉 취약계층(사회적 소수자) 관련성	46
〈표 24〉 프레임	47

I. 연구 필요성

보도전문채널 YTN은 보도 프로그램을 통한 공적 기능 수행을 전제로 방송사업권을 부여받은 전문채널로서, 일정 주기마다 이루어지는 재승인 절차를 통해 공익적 책무의 이행 수준에 대한 평가를 받아 왔다. 보도전문채널은 일반 방송에 비해 뉴스 제공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사회적 쟁점에 대한 정보 해석과 의제 설정 과정에서 차지하는 영향력 또한 크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보도의 공정성은 단순한 편집 원칙을 넘어, 시민이 공적 사안을 이해하고 판단하는 과정의 신뢰도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인식되어 왔다. 한편, 국내외 정치환경의 변화, 국제정치와 경제환경의 변화, 보도 경쟁의 심화, 사회적 쟁점과 그 쟁점을 다루는 방식의 변화 등은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한층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으며, 이에 따라 재승인 심사 역시 형식적 기준을 넘어 실질적 검증을 요구받게 되었다. 외부 독립 연구기관에 의한 공정성 분석은 이러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로서, 보도 내용과 제작 관행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재승인 판단의 객관성과 설명 가능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25년은 그 어느 해보다 정치·사법·외교 이슈가 숨가쁘게 전개되며 국가 운영 전반에 중대한 전환점을 남긴 한 해였다. 전년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정치적 불안정이 심화되었고, 작년 12월 14일 국회는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하였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올해 4월 4일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현직 대통령의 구속이라는 헌정사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를 둘러싼 정치적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기도 했다. 올 상반기의 이러한 정치적 혼란은 우리 사회전반의 진보와 보수의 갈등으로 표출되었고, 길거리 집회로 이어지면서 사회적 갈등의 골이 깊어지기도 했다.

6월 3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는 이러한 정치적 격변 속에서 치러졌고, 새로 출범한 정부는 국내 정치의 안정화, 사회통합,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 등에 대응해야 했다. 8월 이후 미국의 관세 인상과 보호무역 강화 기조가 본격화되며 통상과 외교 현안이 주요 이슈로 부상했고, 정부는 경제·외교 정책의 조율에 집중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10월 말 개최된 경주 APEC 정상회담은 국제협

력과 공급망 안정, 통상 질서 재정립을 논의하는 계기가 됐다. 올 하반기는 국내 정치의 격변과 함께 국제질서 변화에 대한 새 정부의 대응역량이 시험대에 오른 시기로 평가될 수 있다.

2025년은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 사회적 갈등의 심화, 국제질서의 불확실성 확대, 사회적 화합의 쟁점 등이 중첩된 시기였다. 이러한 환경에서 보도전문채널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민주적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사실을 정확히 제시하고 쟁점을 구조화하는 공적 역할을 요구받았다. YTN은 정치·사회적 긴장 국면에서 주요 쟁점과 갈등의 전개, 제도적 해결 과정을 지속적으로 보도하며 공론장의 기본 조건을 형성해 왔다. 대선 과정에서는 후보 간 경쟁이 제도와 규범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실 검증과 정책 중심의 보도를 통해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지원하는 역할도 수행해야 했다. 또한, 국제정세의 불안정 속에서 국제뉴스를 다각도로 조망함으로써 국내 여론이 특정 시각에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해 왔다. 이러한 보도 행위는 평가의 대상이 되는 동시에, 민주주의 사회에서 보도전문채널이 수행해야 할 공정성과 공적책임의 기준을 점검하게 하는 출발점이 된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YTN의 보도가 공정성의 원칙에 부합했는지를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보도전문채널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했다. 이 연구는 2025년 방송된 YTN 보도·시사 프로그램이 공정성을 확보하여 공적 책임을 적절히 수행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주요 시청시간대 뉴스 프로그램 <뉴스 나이트>와 <뉴스 와이드>를 분기별로 고르게 포함되도록 샘플링하여 내용분석을 적용하여 평가하였고, 시사교양 프로그램 <팩트추적>을 대상으로 양적 분석과 함께 전문가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여 양적 분석 결과의 해석적 측면을 보완하였다. 이러한 실증적 연구를 통한 보도·시사 프로그램의 공적책임과 공정성 진단은 2025년의 수행을 평가함과 동시에 향후의 방향설정에도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본다.

II. 이론적 논의

1. 보도전문채널의 공적책임 논의

이 연구는 보도전문채널의 재승인 절차의 부분으로 진행되는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공적책임과 공정성 진단이므로, 관련법이 보도전문채널의 공적책임과 공정성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는 특히 중요하다. 이 쟁점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학술적 논의와 다양한 사회집단으로부터의 요구도 중요하고 주장하는 바의 공통적 지점도 분명히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논의의 관점과 차원들이 매우 다채로워서 방송기업의 재승인 절차의 한 부분으로 다 수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관련법에서의 규정은 학술적 논의와 사회적 요구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다채로운 논의에 기초해서 입법절차를 거쳐 만들어진 것이므로, 공적책임과 공정성에 대한 공식화된 사회적 합의라고도 볼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이 연구는 보도전문채널의 공적책임에 대한 논의를 현행법에서 공적책임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방송법 제2조의 용어정리에서 “보도”를 “국내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전반에 관하여 시사적인 취재보도, 논평, 해설 등의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전문편성”은 “특정 방송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렇게 정의된 ‘보도’와 관련한 전문편성을 하는 일명 ‘보도전문채널’의 공적책임을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별도 조항은 없다. 한편, 방송법 제5조에서 방송의 공적책임을 5개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영방송과 민영방송, 지상파방송과 유료방송의 경계를 넘어 우리나라 모든 방송이 공히 갖게 되는 공적책임을 규정한 것이다. 우리나라 방송법은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채널에 국한된 공적책임을 별도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러한 채널도 방송법 제5조에서 규정한 방송의 공적책임을 갖는 것이 당연하다. 그 내용은 5개 항목으로 정리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다.

- ① 방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 ② 방송은 국민의 화합과 조화로운 국가의 발전 및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

- 하여야 하며, 지역간·세대간·계층간·성별간의 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방송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방송은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 ⑤ 방송은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의 선도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음란·퇴폐 또는 폭력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법조항들은 방송의 공적책임은 법적으로 규정한 항목들이므로,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채널들에도 이 공적책임이 그대로 적용되는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이다. 제1항과 제2항의 전반부는 방송이 수행할 공적책임을 “~하여야 한다”라는 긍정적 문장으로 작위의무를 표현하고 있으며, 제2항의 후반부와 제3항, 제4항, 제5항은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부정적 문장으로 부작위의무를 표현하고 있다. 제1항은 인간존엄과 가치와 민주적 질서의 존중이라는 포괄적이고 선언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정치적 의미를 더 담아내어, 국민화합, 국가발전, 여론형성을 언급하고 있다. 제3항, 제4항, 제4항도 여전히 선언적 취지가 강하지만, 방송이 사회적 차원의 중대한 갈등과 부정적 효과를 유발시키지 않는 선에서 활동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방송법 제5조가 규정한 방송의 공적책임은 모든 방송의 영역에 적용되고 있지만, 언론학에서 방송의 공적책임에 관한 연구들은 지상파방송을 중심으로 한 공영방송을 다룬 경우가 다수를 차지했다(김진웅, 2008; 배진아, 2007; 조소영, 2019). 유료방송이 자리를 잡은 2000년대부터는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유료방송을 대상으로 공적책임 이슈를 다루기보다는 공영방송을 대상으로 한 공적책임 연구에 더 집중된 것으로도 보인다. 공영방송의 책무성 유형을 책무의 대상 및 자율성 수준에 따라 법적 책무성, 위계적 책무성, 전문적 책무성, 정치적 책무성의 네 가지로 구분한 연구도 있었다(배진아, 2007). 많은 학술적 연구들은 어려운 여건 하에서 성장 중인 유료방송에 공적책임을 묻기보다는 지상파방송의 공적책임을 묻는 것이 사회적 이점이 더 크다고 보았을 수도 있다.

반면, 유료방송의 공익책임에 대한 논의도 있었는데, 이를 두고 정치관, 세기관, 매체관에 있어서 진보와 보수 세력 간의 권력투쟁이며, 유료방송의 지역성과 다원주의라는 공적책임을 강조하는 것은 신자유주의와 세계 경제의 글로벌

별화 추세에 힘입은 시장경쟁원리를 견제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었다(정윤식, 2005). 이는 유료방송이 특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공적책임의 영역이 지역성과 다원주의라는 주장을 통해서 이윤추구를 본격적으로 내세운 유료방송에 공적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있음을 언급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 앞서 현행 방송법은 제5조를 통해서 방송의 공적책임을 지상파방송과 유료방송을 구분하지 않고 공히 부과하고 있다.

현대 미디어 환경에서 전파의 물리적 희소성 논리가 약화되었지만, 민주주의 실천에서 방송이 갖는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방송의 공적책임의 가치는 퇴색되지 않았다. 방송의 공적책임에 대해서는 학술적, 정책적 측면에서 다양한 논의가 있었는데, 가장 광범위하게 제시된 하위 요소들로는 공익성(Public Interest), 공정성(Fairness), 다양성(Diversity)을 들 수 있다.

첫째, 공익성은 시청자 권익 보호, 국민 문화 향상 등 사회 공동의 이익에 봉사하는 책무를 포괄한다. 방송 공익성 개념은 희소한 전파자원을 제한된 수의 방송사에 할당하여 독과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대가로 민영 방송사들로 하여금 공익에 기여해야 하는 책임을 부여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백미숙, 2004). 공익성 개념은 공적책임의 하부개념의 하나로 언급되기도 하지만, 학술적 연구들에서 공익성 개념은 방송의 공적책임과 거의 동질적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때로는 대등한 개념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방송법 제5조가 방송의 공적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방송법 제6조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다른 개념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제5조가 공적책임의 선언적 의미가 강하다면, 제6조에서 규정한 공정성과 공익성은 공적책임을 실현시키는 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어, 보도와 각종 영역의 프로그램 제작에서의 실천적 성격도 드러내고 있다.

둘째, 공정성은 민주적 여론 형성을 추구하여 보도에서 진실성, 객관성, 균형성의 확보를 의미한다. FCC는 1987년에 공정성 원칙(Fairness Doctrine)이 방송사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오히려 방송 전파에서 중요 문제에 대한 토론을 위축시켰다고 판단하여 공식적으로 폐지하기도 했지만, 보도와 관련한 방송의 사회적 책무(Accountability)로서의 공정성은 여전히 강조되고 있다(김진웅, 2008; 송영주, 김하나, 박진우, 2022; 정연우, 2020). 공정성과 관련해서는 다음 절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다.

셋째, 다양성은 사회적, 문화적 다양한 입장을 반영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목소리가 소외되지 않고 전달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양성은 방송의 공적책임에서 중요한 요소로 공익성, 공정성과 함께 하나의 하부 실천개념으로 여기서 제시했는데, 방송법에서는 제6조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의 항목들을 열거할 때, 제6조제2항 “방송은 성별·연령·직업·종교·신념·계층·지역·인종 등을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와 제6조제5항 “방송은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언급되어 있다. 이 조항들은 다양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다양성의 취지와 정확히 일치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한편, 방송법에서 다양성을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의 한 부분이 아니라, 별개의 개념으로 다루기도 했다. 제44조제5항에서 한국방송공사의 공적책임을 언급하면서, “방송의 지역적 다양성을 구현”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제69조제1항에서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함에 있어 공정성·공공성·다양성·균형성·사실성 등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편성과 관련해서는 공정성과 대등한 개념으로 열거되어 있기도 하다. 이 연구는 전반적인 기업활동을 중심으로 파악하기보다는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공적책임과 공정성을 진단하고 있으므로, 편성 차원의 논의가 아닌 프로그램 차원의 논의로 국한하고자 한다.

2.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공정성 논의

이 연구가 진단하고자 하는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방송법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부터 살펴보겠다. 앞서 논의했듯이, 방송법에서 방송의 공정성은 방송의 공적책임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다루었으며, 방송사나 방송의 전반적 수행을 다루며 선언적 성격이 강한 공적책임 개념과는 달리 프로그램 편성이나 제작 단계에서 공적책임의 실천적 측면이 더 강하다. 방송법에는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공정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방송법 제6조의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에는 모든 프로그램에 공히 적용되는 내용과

함께 시사·보도 프로그램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언급들이 있다. 제6조는 공정성 항목과 공익성 항목을 구분하고 있지는 않으며, 다음과 같이 9개 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

- ①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 ② 방송은 성별·연령·직업·종교·신념·계층·지역·인종 등을 이유로 방송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종교의 선교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방송분야의 범위 안에서 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 ③ 방송은 국민의 윤리적·정서적 감정을 존중하여야 하며, 국민의 기본권 옹 호 및 국제친선의 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 ④ 방송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하여야 한다.
- ⑤ 방송은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⑥ 방송은 지역사회 균형 있는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여야 한 다.
- ⑦ 방송은 사회교육기능을 신장하고, 유익한 생활정보를 확산·보급하며, 국민 의 문화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 ⑧ 방송은 표준말의 보급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언어순화에 힘써야 한다.
- ⑨ 방송은 정부 또는 특정 집단의 정책 등을 공표하는 경우 의견이 다른 집단 에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또한 각 정치적 이해 당사자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경우에도 균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방송법 제6조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에 관련한 항목들을 다루고 있는데, 특히, 제1항에서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함 으으로써 보도 프로그램을 특정해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조하고 있다. 제5항은 방송은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 익을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이익 반영을 포함하는 사회적 다양성을 지향하고 있다. 제9항에서 방송은 정책 공 표시에 “의견이 다른 집단에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특히 정치적 이해 당사자에 균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는 방송 보도는 방송사의 운영주체가 누구이든 간에 정치적 당파성을 가져서는 아니 되며, 정치적 균형성을 유지할 것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방송 공정성의 원칙은 공민영, 지상파방송과 유료방송을 막론하고 적용되고 있으며, 특히 뉴스를 포함한 정치적 견해를 다루는 프로그램에서는 균형성이 중요함을 말하고 있다.

방송법 제6조에서 강조된 공정성, 객관성, 다양성, 균형성은 대법원 판결문에도 반영되어 있는데, 2019년 대법원 판결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입법 취지, 문언적 의미 등을 종합하여, 방송 공정성의 각 항목들을 정리하고 있다.

‘객관성’이란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 증명가능한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여 있는 그대로 가능한 한 정확하게 사실을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공정성’이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에 대해 다양한 관점과 의견을 전달함에 있어 편향적으로 다루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균형성’이란 각각의 입장에 대하여 시간과 비중을 균등하게 할애해야 한다는 양적 균형이 아니라 관련 당사자나 방송 대상의 사회적 영향력, 사안의 속성, 프로그램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균등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평하게 다루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이란, 사회 구성원의 입장이나 해석이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나뉘어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된 사안이나 다양한 사회적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안을 의미한다.(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5두4947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판결문에서도 방송의 공정성과 관련한 보편적 가치를 정리하고 있지만, 객관성, 공정성, 균형성 등의 개념은 방송의 시사·보도 프로그램에서 사회적 쟁점, 정치적 사안을 다룰 때에 특히 강조될 수 있는 가치들이다.

보도 프로그램이 갖출 주요 윤리적 가치는 학술적으로 더 다양한 시각에서 논의되어 왔는데, 학술적으로는 공정성 개념에 대한 명시적 합의는 없어도 포괄적이고 암묵적인 합의는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1>은 방송 공정성의 하위개념들을 논의한 많은 학술적 연구와 저술들 중에서 객관화가 비교적 용이

한 유형화들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표 1 > 방송 공정성의 하부개념에 관한 주요 논의들

출처	공정성의 하부개념들
이민웅(1996)	진실성, 적절성, 균형성, 중립성, 다양성, 이데올로기
강태영, 권영설(2000)	진실성, 적절성, 균형성, 중립성, 다양성
심훈(2014)	사실성, 권력감시, 균형성, 중립성, 다원성, 취약계층보호
이종혁, 정낙원, 김세은(2017)	양적균형(보도량), 질적균형(프레임)
이정훈, 정준희 (2018)	정확성, 균형성, 불편부당성, 시대적 대의, 공의로움
조항제(2019)	사실성, 투명성, 균형성, 중립성, 다양성, 중요관련성, 불편부당성, 반편향성, 본래성

균형성, 중립성, 다양성, 진실성, 사실성 등이 공통적으로 제시되었으며, 균형성은 질적 양적 측면을 모두 포함하지만, 하부개념으로 정리할 때는 균형성은 양적 측면, 중립성은 질적 측면을 의미하고 있었다. 다양성도 표현은 달랐지만, 다원성과 취약계층보호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다수의 연구들은 균형성, 중립성, 다양성, 진실성 등의 개념들을 공정성 개념과 대등하거나 구분되는 개념으로 보기보다는 하부개념으로 정리하고 있다(이민웅, 1996; 강태영, 권영설, 2000; 조항제, 2019).

공정성의 하부개념으로 모든 연구에 등장하는 개념은 균형성인데, 앞서 정리한 대법원 판례에서처럼 균형성을 양적으로만 보지 않고 양적 질적 측면의 균형성을 포괄하는 경우도 있고(강태영, 2004; 이민웅, 1996), 그것으로 나누고자 할 때에는 균형성은 양적 균형을, 중립성이 질적 균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 연구도 있다(강태영, 권영설, 2000). 그런가 하면, 균형성을 양적·질적 균형을 모두 의미하면서도, 중립성 개념을 균형성과 구분하여, “정치적·사회적 갈등 사안을 다룰 때 언론이 당파적 가치 개입을 배제하고 불편부당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정의한 연구도 있다(이민웅, 1996). 이종혁, 정낙원, 김세은(2017)은 선거방송을 평가하면서, 균형성에 중점을 두면서 양적균형과 질적균형을 보도량과 프레임으로 조작적 정의를 하기도 했다. 당위적 규범으로서의 공정성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공정성 개념을 보도의 평가에 적용하기 위해서

채택한 현실적인 방안으로 보인다.

공정성의 하부개념으로 투명성 개념도 제안된 바 있다(조항제, 2019). 투명성은 취재원 공개, 정보 획득 경로의 설명, 여론조사결과 보도에서 적절한 정보의 제공, 편집 과정에 대한 명확한 책임 소재 명시 등을 통해서 시청자가 보도의 신뢰성과 공적 정당성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히 보도전문채널은 국가로부터 제한적 방송사업권을 부여받는 공적 매체이기 때문에 이러한 원칙은 단순한 권고 수준이 아니라, 사회적 책무의 근거로도 작동하며, 법적·제도적으로 요구된다. 또한, 온라인 뉴스매체들이 늘어나면서 허위정보에 대한 공방이 증가하고 있어, 향후의 방송 보도의 공정성 논의에서 공정성의 하부개념으로서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3. YTN 시사보도 프로그램 공적책임과 공정성 논의의 분석틀

앞선 논의에 기초하여, 보도전문채널의 재승인 절차의 하나인 YTN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진단을 위한 분석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결과는 채널 재승인 판단 근거의 일부가 되므로, 이 연구의 분석틀은 학술적 차원의 개념적 논의들에 대한 고려뿐 아니라 객관화 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해서 마련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크게 (1) 양적 공정성, (2) 질적 공정성, (3) 투명성으로 유형화하여 공정성 진단을 하고자 한다.

양적 공정성을 양적 균형성으로 보는 기존 연구들이 많이 있지만(강태영, 권영설, 2000; 이민웅, 1996; 이종혁, 정낙원, 김세은, 2017), 균형성의 개념도 단순하지는 않다. 양적 균형성이 절대적 균등안배를 의미하는지, 비례적 균등을 의미하는지, 소수자와 취약계층의 반영을 위한 과비례적 반영을 의미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른데, 실은 모두 포괄한다고 볼 수 있다.

선거방송을 포함하는 정치적 쟁점들을 다루는 시사 보도 프로그램의 게스트의 경우엔 경합 중인 정당에 출연자 숫자를 똑같이 맞추는 균등안배를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적용된 불문율이다. 소수정당을 다수정당과 동등하게 다루지는 않지만, 다수 양당의 의석수 비례로 출연자의 비율을 맞추는 것은 아니다. 한편, 뉴스 아이템 영역에서는 언론사의 주관적 판단이기는 하지만, 국내정치,

국제정치, 국내경제, 국제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의 영역에 대한 중요도나 수용자 관심도에 비례하여 아이템의 수나 시간이 배분될 수도 있다. 수용자의 보도 아이템에 관한 관심의 영역은 넓고 다양한데, 뉴스 아이템의 시간분량을 정치뉴스에 과도하게 할당하거나 지역뉴스를 과소하게 할당한다면 이는 균형성에서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적 소수자와 취약계층의 의견 반영을 위한 과비례적 반영은 결국은 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인데, 전체 수용자의 관심이 크지 않는 아이템이더라도 사라지면 안 된다는 가치적 판단이 있다면, 그 목소리를 살리고 반영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 연구에서 양적 공정성은 단지 정치적 성향상의 균형성만 의미하지는 않으며, 보도 아이템 영역과 제시방식의 다양성과 균형성도 포함하고 있으며, 출연자와 게스트의 성별 비율, 장애인 여부, 게스트의 직업적 유형 등과 같은 양적 다양성도 포함한다.

질적 공정성은 이론적 차원에서는 양적 균형성만은 설명하지 못하는 질적인 균형성을 의미하는데(이민웅, 1996), 이는 중립성으로 정의되기도 했으며(강태영, 권영설, 2000), 프레임으로 정의되기도 했다(이종혁·정낙원·김세은, 2017). 뿐만 아니라, 심층성(강태영, 권영설, 2000), 시대적 대의와 사회정의실현(이정훈, 정준희, 2018) 등도 질적 차원의 공정성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제시된 공정성의 하위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보도채널의 질적 공정성 진단에서 진보와 보수의 정치적 균형성에 맞추는 것이 이런 논의에 비춰볼 때도 의미적 측면에서는 타당해 보이지만, 실제로 보도 프로그램에서 앵커가 정치적 편향성을 노골적으로 표출하는 경우는 드물며, 대담 코너에 출연한 게스트의 경우는 프로그램 기획단계에서부터 진보와 보수 인사가 기본적으로 양적 균형을 유지하고 있어서 질적 균형성이 뚜렷하게 무너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서, 질적 공정성을 양적 공정성을 넘어선 객관적이고 의미있게 진단하기에는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면, <2024년 YTN 시사보도 프로그램 공정성 진단 연구>에서도 총선보도 내용편향성에 관한 분석에서 95% 전후의 아이템이 여당이나 야당에 유리한지 “분류할 수 없음”으로 나타났고, 아이템별 총선보도 편향성에서는 9개 아이템 영역들 중 5개 영역에서 100%의 아이템이 “분류할 수 없음”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는 시사교양 프로그램에서 있어서도 질적 공정성에 도달했는

지 하지 않았는지를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데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질적 공정성에 도달하는 방법은 하나가 아니라는 전제하에서 접근해보고자 했다. 이 연구는 그런 취지에서 시사교양 프로그램의 전반과 주요 출연자들이 정보와 지식을 정확하게 제공하는 데에 중점을 두는지 의견과 평가를 진실되고 적절하게 제공하는 데에 중점을 두는지를 통해서 해당 프로그램이 질적 공정성을 어떻게 실현하고자 하는지를 진단하고자 했다. 또한 질적 공정성을 위해서 시사교양 프로그램의 취재와 구성에서 순수보도 프로그램에서와 다른 어떤 노력들을 했는지, 앞으로 공정성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시도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를 평가하고 제시하고자 했다.

투명성은 정보의 정확성, 진실성 등을 강화하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뉴스의 출처가 어디인지,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어야 그 정보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최소한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수년간 유튜브와 SNS를 통한 허위정보의 유통이 정치적,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뉴스의 출처는 더욱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또한 정책수립과정과 선거과정에서 수많은 여론 조사와 통계가 제공되고 있는데, 객관성을 위장한 엉터리 수치들이 민주주의 과정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사회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이러한 수치 자료들의 출처와 집계 방식 등 정확한 정보의 제공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점은 공정성 이슈에서도 중요해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투명성을 공정성 진단의 중요한 부분으로 제시하고자 했다. 투명성을 진단하는 방안으로 취재원이나 취재의 소스를 실명으로 밝히는지, 익명 처리하는지, 아예 밝히지 않는지의 문제를 포함하며, 취재원 구성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III. 연구방법

1. 분석대상과 자료수집

본 연구는 보도전문채널 YTN의 공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메인뉴스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실시하였고,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방영된 시사교양 프로그램 <팩트추적>에 대해서 양적인 분석과 함께 전문가 심층인터뷰(In-depth Interview)를 병행하여 다각적으로 분석했다.

1) 보도 부문

(1) 분석대상 및 분석기간

본 연구는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YTN 뉴스를 대상으로 체계적 표본 추출(systematic sampling)을 실시하였다. 전체 기간을 분기별로 구분하여 각 분기를 대표하는 월(2월, 5월, 8월, 11월)을 선정하였으며, 각 월에서 주중과 주말을 균형있게 포함하도록 표본을 설계하였다. 분석 대상 프로그램은 YTN의 프라임타임 뉴스인 평일 <뉴스NIGHT>(21:40)와 주말 <뉴스와이드>(21:40)이며, 구체적인 분석 일자는 <표 2>와 같다. 이때 8월 6(수요일)의 경우 <뉴스NIGHT>가 결방되고 '뉴스특보'가 방송되어, 1주일 후인 8월 13일(수요일)로 대체하여 수집·분석하였다.

<표 2> 분석대상 뉴스프로그램

구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뉴스NIGHT>					<뉴스와이드>	
2월	3		5		7	8	9
5월	12		14		16	17	18
8월	4		6→13		8	9	10
11월	3		5		7	8	9

(2) 자료의 수집

선정된 날짜의 전체 뉴스에 대한 스크립트를 YTN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수집하였다. 텍스트 분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스크립트와 실제 방송 동영상을 교차 검증하였으며, 불일치하는 부분은 동영상을 기준으로 수정하였다. 이러한 중복 확인 과정을 통해 실제 방송 내용과 분석 자료의 일치도를 확보하였다.

<표 3>을 보면, <뉴스NIGHT>의 전체 보도 건수는 461건, <뉴스와이드>는 259건이었다. 월별로 살펴보면, 2월에는 <뉴스NIGHT>가 119건(25.8%), <뉴스와이드> 68건(26.3%), 5월은 각각 98건(21.3%), 50건(19.3%), 8월은 133건(28.9%), 63건(24.3%), 11월 111건(24.1%), 78건(30.1%)으로 나타났다.

<표 3> 프로그램 및 월별 분석대상 보도 수(단위: 건, %)

구분	뉴스NIGHT	뉴스와이드	전체
2월	119	68	187
	25.8%	26.3%	26.0%
5월	98	50	148
	21.3%	19.3%	20.6%
8월	133	63	196
	28.9%	24.3%	27.2%
11월	111	78	189
	24.1%	30.1%	26.3%
전체	461	259	720
	100.00%	100.00%	100.00%

2) 시사 부문

시사교양 프로그램의 경우 일반 뉴스와 달리 각 에피소드가 단일 주제를 심층접근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표본추출이 아닌 전수조사 방식을 채택하였다. 특히 YTN의 <팩트추적>은 한 회당 하나의 핵심 이슈를 집중적으로 검증하는 형식으로, 각 에피소드가 독립적인 분석 단위를 구성하므로 전체 방영분을 분석

하는 것이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공정성 평가에 필수적이라고 판단하였다.

분석대상은 <표 4>에서와 같이,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편성된 총53회에서 제21대 대선 관련 이슈인 탄핵 절차, 조기 대선, 특검 파견 등 주요 정치 일정 및 언론사 인력운용으로 인해 결방된 14회분과 홈페이지에서 동영상 미제공된 제34회차의 방영분을 제외한 총38회의 모든 방영분을 분석하였다.

<표 4> 2025년에 방영된 <팩트추적> 프로그램 목록

번 호	방송 일자	회 차	아이템
1	01.01	25	<신년기획> 지도 위의 '행복 격차'소멸의 현장: 남은 사람들의 이야기
2	01.08	26	<신년기획> 지도 위의 '행복 격차'사라진 버스 노선과 강남 공화국
3	01.18	27	비극과 미궁, 여객기 참사 '미스터리'
4	01.22	28	트럼프 2.0 시대...“위기를 기회로”
5	01.29	29	“살 빠려다 마약류 중독”...다이어트약의 위험한 유혹
6	02.05	30	고령화 해법 vs 갈등의 불씨...‘정년 연장’의 딜레마
7	02.12	31	거짓으로 클릭 장사, ‘가짜정보 비즈니스’
8	02.19	32	그날의 ‘헌법’, 내일을 묻다
9	02.26	33	파면과 복귀의 갈림길...‘尹 탄핵 심판’ 결론은?
10	03.05	34	분열과 혐오도 ‘맞춤 배달’...‘추천 알고리즘’의 덫 (제34회차는 분석에서 제외됨)
11	03.12	35	감염병 역습의 그림자, ‘건강 불평등’
12	04.09	36	‘계엄 선포에서 파면까지’, 숨 가뼀던 그날의 기록
13	04.16	37	방심이 부른 ‘괴물 산불’...“모든 걸 앗아갔다”
14	04.23	38	‘마지막 이별’조차 사치가 된 시대
15	05.07	39	“무료라더니 슬쩍 결제”...눈속임 상술 ‘다크패턴’
16	05.21	40	<선택 2025, 약속의 무게> 대선 공약 집중 점검 Ⅰ
17	05.28	41	<선택 2025, 약속의 무게> 대선 공약 집중 점검 Ⅱ
18	06.11	42	<선택 2025, 약속의 무게> 희망의 첫걸음, 새 대통령에게 바란다
19	06.18	43	<6·25 전쟁 75주년 연속기획> 사라진 흔적, 남겨진 이야기 Ⅰ
20	06.25	44	<6·25 전쟁 75주년 연속기획> 사라진 흔적, 남겨진 이야기 Ⅱ
21	07.02	45	AI 시대, 공존의 길을 묻다
22	07.16	46	유출된 정보, 누가 당신을 노리는가?
23	07.23	47	여름의 유혹, 안전의 빈틈
24	08.06	48	위기의 자영업 가맹점주들...본사는 호황 중?
25	08.13	49	조합원의 무너진 꿈_지역주택조합의 민낯
26	08.27	50	“우리 아이가 위험하다”...청소년 자살률 '빨간불'
27	09.03	51	불붙은 주 4.5일제 논의...우리의 방향은?
28	09.17	52	비만인들의 희망 '위고비 매직'의 명과 암
29	09.24	53	텅 빈 집, 대한민국을 좀먹다

30	10.08	54	(추석 연휴) 노인들은 암표로 야구를 본다 '디지털 격차'
31	10.15	55	현웃, 누가 입고 어디로 사라지나'
32	10.22	56	반복되는 일터 속 죽음... '산재공화국' 오명 벗을까
33	11.05	57	배달앱, 편리함의 이면... 누가 대가 치르나?
34	11.22	58	국경을 넘은 온라인 사기... 남은 숙제는?
35	11.26	59	부동산 신규 아파트 하자보수 문제
36	12.03	60	비상 계엄 1년, 민주주의를 다시 묻다
37	12.10	61	K-열풍, 열광과 이면
38	12.17	62	<2025년 연말특집 2부작> AI의 빛
39	12.24	63	<2025년 연말특집 2부작> AI의 어둠

2. 분석방법과 분석유목

1) 내용분석의 분석유목

(1) 뉴스 프로그램

분석대상은 평일 21시 30분대에 방송되는 <뉴스NIGHT>와 주말 같은 시간대의 <뉴스와이드>로, YTN의 대표적인 프라임타임 뉴스 프로그램이다. 내용 분석의 분석유목은 형식면에서는 크게 일반보도(기자리포트 패키지, 현장연결, 단신, 스튜디오 대담)과 외부인 초청대담으로 분류하여 설정하였다.

수집된 뉴스의 내용 제시방식을 살펴본 결과, <표 5>를 보면, 앵커가 리포트 소개 후 기자가 사전에 제작한 영상과 코멘트를 제시하는 형태인 '기자 리포트 패키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720건의 보도 가운데, 59.4%인 428건이 여기에 해당했으며, 프로그램 별로도 '기자 리포트 패키지' 방식의 구성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뉴스NIGHT>의 경우, 전체 461건 중 58.1%인 268건이 기자 리포트 패키지였으며, <뉴스와이드>는 61.8%인 160건이었다. 다음으로는 '단신'이 전체 720건 중 33.6%인 242건이었으며, 프로그램 별로도 <뉴스NIGHT> 167건(36.2%), <뉴스와이드> 75건(29.0%)로 나타났다. '외부인 초청 대담'은 <뉴스NIGHT> 전체 461건 중 2.4%인 11건, <뉴스와이드>는 3.1%인 8건이었다.

<표 5> 프로그램별 뉴스 제시 방식(단위: 건, %)

구분	뉴스NIGHT	뉴스와이드	전체
기자 리포트 패키지	268	160	428
	58.1%	61.8%	59.4%
(기자)현장 연결	10	4	14
	2.2%	1.5%	1.9%
단신	167	75	242
	36.2%	29.0%	33.6%
스튜디오 대담	1	0	1
	0.2%	0.0%	0.1%
외부인 초청 대담	11	8	19
	2.4%	3.1%	2.6%
기타	4	12	16
	0.9%	4.6%	2.2%
전체	461	259	720
	100.0%	100.0%	100.0%

보도의 공정성을 다각도로 평가하기 위해, <표 6>에서와 같이 뉴스 아이템의 유형과 편향성, 내용 구성방식, 취재원의 투명성, 외부인 대담의 균형성을 전체 뉴스를 분석했고, 뉴스 소재별로 2025년 6월 3일 제21대 대선 보도에 관한 뉴스와 정치 아이템 뉴스의 경우 추가로 공정성 및 편향성을 분석하였다.

<표 6> 뉴스아이템 분석방법

분석 차원	분석 유목	세부 내용 및 코딩 기준
일반 보도	뉴스 특성	뉴스 제시방식(리포트, 현장연결, 단신, 대담 등), 아이템 유형(국내정치 등 25개 분류), 구성방식(사건설명·분석·논평 조합)
	취재원 분석	취재원 제시 형태(투명/익명/미제시), 투명 취재원 유형(정부·정당·전문가 등 26개 분류)
외부인 대담	대담 구성	대담 아이템 수(최대 3개), 아이템 유형(25개 분류), 출연자 수(1명/2명/3명 이상)
	출연자 특성	출연자 유형(정당·전문가 등), 성별(남/여/기타), 장애 유무(장애/비장애/모름), 논조(정보전달/의견평가)
공정성 진단	정치·대선 편향성	국내정치 아이템 및 대선 내용 편향성(5점 척도 평가), 대선 시간배분 적정성(여/야/균형 등 70% 기준)
	태도 및 관점	앵커 논조(정보전달/의견평가), 대선 아이템 유형(판세·전략·인물분석 등 10개 분류)

(2) 시사교양 프로그램

전수 조사를 통해 주제 영역(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의 분포와 정치분야 아이тем의 편향성 여부, 경제적 취향계층과 장애인, 고령층이나 아동/청소년, 여성 및 성소수자 등 취향계층 이슈 관련성, 갈등제시중심/문제해결중심 등 프레임 차원에 대해 평가했다.

2) 전문가 심층인터뷰

<팩트추적>은 시사교양 프로그램으로 보도 프로그램과 구성, 내용, 취지에서 달라, 양적 분석과 진단에만 국한하지 않고, 질적 분석을 통해서 통계적 해석에 덧붙여 해석적 보완을 하고자 했다. 질적분석으로 수용자 대상으로 한 FGI(한국방송학회, 2025)와 공정성에 대한 전문가 심층인터뷰 등의 방법들이 가능한데, 본 연구는 공정성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보다 전문적인 식견과 분석으로 제시하기 위해서 서면 전문가 심층인터뷰를 채택했다.

전문가 심층 인터뷰는 2025년 12월 24일부터 2026년 1월 12일까지 20일간 진행했다. 인터뷰 대상은 다큐멘터리와 시사 프로그램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적 의견을 다양한 시각에서 제시할 수 있는 6인의 전문가로 구성하였다. <표 7>에서와 같이 심층인터뷰 대상은 특정 정당 소속이나 업계 경쟁사 소속이 아닌 자들로, 저널리즘, 방송학, 문화비평론, 방송산업정책, 다큐멘터리 창작과 스토리 창작 영역의 전문가들로 구성하였다.

<표 7> 전문가 심층인터뷰 대상

구분	전문분야	성별	연령대
전문가A	교수, 다큐멘터리 감독	여	40대
전문가B	교수, 시나리오 작가	여	40대
전문가C	교수, 방송산업정책	남	50대
전문가D	교수, 저널리즘	남	60대
전문가E	교수, 문화비평	여	50대
전문가F	교수, 방송학	여	60대

전문가 심층인터뷰의 질문 문항은 다음 6개로 구성하였다.

- ▷ <팩트추적>의 아이템 선정의 적절성은 어떠하다고 평가하십니까?
- ▷ <팩트추적>이 해당 이슈와 관련한 상반된 의견들을 다루는 균형성은 어떠하다고 평가하십니까?
- ▷ <팩트추적>이 수행한 취재의 공정성은 어떠하다고 평가하십니까?
- ▷ <팩트추적>이 제시한 진술과 증거의 객관성은 어떠하다고 평가하십니까?
- ▷ <팩트추적>이 사회적 취약계층(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 노숙자, 난민 등)을 편견없이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떠하다고 평가하십니까?
- ▷ <팩트추적>의 공적책임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코더교육과 코더 간 신뢰도

본 연구의 코딩은 미디어 관련 전공 학부 졸업생 1인, 박사과정생 2인, 박사학위 소지자 1인으로 구성된 총4명의 코더가 수행하였다. 코더들은 모두 언론학 또는 미디어 관련 분야의 학술적 배경과 내용분석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뉴스 콘텐츠의 공정성 평가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판단했다. 코딩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체계적인 사전 교육을 실시하였다. 연구진은 상세한 코딩북을 작성하여, 각 분석 유목의 개념과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였으며, 코딩 과정에서는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구축하여 분류가 모호한 항목이나 판단이 어려운 사례가 발생할 경우 즉시 연구진과 코더들이 협의하여 세부 기준을 정립하였다. 이러한 지속적인 소통과 조율을 통해 코딩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객관적 판단을 극대화하였다.

최종적으로 코더 간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샘플링한 날짜 중 총 3일에 해당하는 내용을 코더 4명이 코딩한 후 이에 대해 Fleiss' κ (카파) 계수를 산출한 결과, 주요 분석 항목에서 0.65~0.70의 값을 나타냈다. 이는 Landis와 Koch(1977)의 기준에 따르면 '상당한 일치도(substantial agreement)'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4명의 평가자 간 높은 신뢰도를 확보했다고 판단된다.

IV. 분석결과

1. 보도 부문

1) 양적 공정성

(1) 뉴스 아이템 유형

뉴스 아이템을 주제별로 분류한 결과, <표 8>을 보면, '국내정치'가 122건(16.9%)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사회' 81건(11.3%), '검찰' 74건(10.3%), '해외/국제'와 '경제' 각 62건(8.6%) 순으로 나타났다. '법원'은 48건(6.7%), '스포츠'는 47건(6.5%), '치안'은 46건(6.4%)이었다. '21대 대선'은 39건(5.4%), '생활'은 38건(5.3%), '중앙행정' 30건(4.2%)이었으며, 그 외 '외교' 17건(2.4%), '북한(통일)' 14건(1.9%), '방송·문화예술' 8건(1.1%) 등이 있었다. 'IT·정보통신', '보건/질병', '노동', '선거 일반', '교육', '환경', '복지'는 각각 1% 이하로 낮은 비중을 보였다.

<표 8> YTN 뉴스 아이템 유형(단위: 건, %)

구분	뉴스NIGHT	뉴스와이드	전체
국내정치	79	43	122
	17.1%	16.6%	16.9%
선거 일반	1	1	2
	0.2%	0.4%	0.3%
21대 대선	28	11	39
	6.1%	4.2%	5.4%
중앙행정	20	10	30
	4.3%	3.9%	4.2%
외교	14	3	17
	3.0%	1.2%	2.4%
북한(통일)	4	10	14
	0.9%	3.9%	1.9%
국방	1	0	1
	0.2%	0.0%	0.1%
지역	1	1	2
	0.2%	0.4%	0.3%
경제	39	23	62
	8.5%	8.9%	8.6%

법원	36	12	48
	7.8%	4.6%	6.7%
검찰	55	19	74
	11.9%	7.3%	10.3%
치안	35	11	46
	7.6%	4.2%	6.4%
사회	50	31	81
	10.8%	12.0%	11.3%
교육	2	1	3
	0.4%	0.4%	0.4%
노동	4	1	5
	0.9%	0.4%	0.7%
환경	1	1	2
	0.2%	0.4%	0.3%
보건/질병	0	4	4
	0.0%	1.5%	0.6%
복지	1	1	2
	0.2%	0.4%	0.3%
젠더	0	0	0
	0.0%	0.0%	0.0%
방송·문화예술	2	6	8
	0.4%	2.3%	1.1%
IT, 정보통신	2	5	7
	0.4%	1.9%	1.0%
스포츠	37	10	47
	8.0%	3.9%	6.5%
생활	20	18	38
	4.3%	6.9%	5.3%
해외/국제	27	35	62
	5.9%	13.5%	8.6%
기타	2	2	4
	0.4%	0.8%	0.6%
전체	461	259	720
	100.0%	100.0%	100.0%

<표 9>에서 뉴스 주제 분포를 시기별로 보면, 2월에는 '국내정치'가 35건(18.7%)으로 가장 많았고, '법원' 28건(15.0%), '경제' 22건(11.8%), '해외/국제' 20건(10.7%) 순이었다. 5월에는 '21대 대선'이 39건(26.4%), '사회' 15건(10.1%), '국내정치'와 '해외/국제'가 각각 12건(8.1%)이었다. 8월에는 '국내정치' 42건(21.4%), '사회' 31건(15.8%), '검찰' 29건(14.8%)이 주요 주제였다. 11월에는 '국내정치'가 33건(17.5%)으로 가장 많았고, '검찰' 30건(15.9%), '사회' 20건(10.6%)이 높은 비중을 보였다.

<표 9> 월별 YTN 뉴스 아이템(단위: 건, %)

구분	2월	5월	8월	11월	전체
국내정치	35	12	42	33	122
	18.7%	8.1%	21.4%	17.5%	16.9%
선거 일반	0	0	0	2	2
	0.0%	0.0%	0.0%	1.1%	0.3%
21대 대선	0	39	0	0	39
	0.0%	26.4%	0.0%	0.0%	5.4%
중앙행정	6	4	5	15	30
	3.2%	2.7%	2.6%	7.9%	4.2%
외교	1	2	7	7	17
	0.5%	1.4%	3.6%	3.7%	2.4%
북한(통일)	1	1	7	5	14
	0.5%	0.7%	3.6%	2.6%	1.9%
국방	0	0	1	0	1
	0.0%	0.0%	0.5%	0.0%	0.1%
지역	1	0	0	1	2
	0.5%	0.0%	0.0%	0.5%	0.3%
경제	22	9	18	13	62
	11.8%	6.1%	9.2%	6.9%	8.6%
법원	28	13	1	6	48
	15.0%	8.8%	0.5%	3.2%	6.7%
검찰	8	7	29	30	74
	4.3%	4.7%	14.8%	15.9%	10.3%
치안	12	9	9	16	46
	6.4%	6.1%	4.6%	8.5%	6.4%
사회	15	15	31	20	81
	8.0%	10.1%	15.8%	10.6%	11.3%
교육	2	0	0	1	3
	1.1%	0.0%	0.0%	0.5%	0.4%
노동	0	0	2	3	5
	0.0%	0.0%	1.0%	1.6%	0.7%
환경	0	0	1	1	2
	0.0%	0.0%	0.5%	0.5%	0.3%
보건/질병	2	1	0	1	4
	1.1%	0.7%	0.0%	0.5%	0.6%
복지	1	1	0	0	2
	0.5%	0.7%	0.0%	0.0%	0.3%
젠더	0	0	0	0	0
	0.0%	0.0%	0.0%	0.0%	0.0%
방송문화예술	5	2	1	0	8
	2.7%	1.4%	0.5%	0.0%	1.1%
IT,	2	2	0	3	7
	1.1%	1.4%	0.0%	1.6%	1.0%

정보통신					
스포츠	14	10	10	13	47
	7.5%	6.8%	5.1%	6.9%	6.5%
생활	11	9	12	6	38
	5.9%	6.1%	6.1%	3.2%	5.3%
해외/국제	20	12	18	12	62
	10.7%	8.1%	9.2%	6.3%	8.6%
기타	1	0	2	1	4
	0.5%	0.0%	1.0%	0.5%	0.6%
전체	187	148	196	189	720
	100.0%	100.0%	100.0%	100.0%	100.0%

(2) 외부인 초청대담 출연자 구성의 다양성

외부인 초청 대담 포맷에서 출연자의 유형을 <표 10>에서 살펴보면, 각 분야별 '전문가'와 '국민의힘'이 각 11명(28.9%)으로 가장 많았고, '더불어민주당' 10명(26.3%), '군소정당'이 3명(7.9%), '타언론사'가 2건(5.3%), 정부기관이 1건(2.6%) 순이었다.

<표 10> 출연자 유형별 분포

구분	뉴스NIGHT	뉴스와이드	전체
대통령실	0	0	0
	0.0%	0.0%	0.0%
정부기관	0	1	1
	0.0%	6.3%	2.6%
더불어민주당	7	3	10
	31.8%	18.8%	26.3%
국민의힘	8	3	11
	36.4%	18.8%	28.9%
조국혁신당	0	0	0
	0.0%	0.0%	0.0%
개혁신당	0	0	0
	0.0%	0.0%	0.0%
군소정당	2	1	3
	9.1%	6.3%	7.9%
지자체	0	0	0
	0.0%	0.0%	0.0%
전문가	4	7	11
	18.2%	43.8%	28.9%

타 언론사	1	1	2
	4.5%	6.3%	5.3%
시민사회·노동·이익 단체	0	0	0
	0.0%	0.0%	0.0%
시청자 및 일반인	0	0	0
	0.0%	0.0%	0.0%
문화예술인, 스포츠 선수	0	0	0
	0.0%	0.0%	0.0%
기타	0	0	0
	0.0%	0.0%	0.0%
전체	22	16	38
	100.0%	100.0%	100.0%

<표 11> 대담 출연자 성별 분포

구분	뉴스NIGHT	뉴스와이드	전체
남성	19	16	35
	86.4%	100.0%	92.1%
여성	3	0	3
	13.6%	0.0%	7.9%
전체	22	16	38
	100.0%	100.0%	100.0%

본 조사에서는 외부인 초청 대담에 출연한 인물 구성의 다양성을 성별과 장애 유무에도 확대하여 분석하였다. <표 11>에서 보듯이, 외부인 초청 대담에 출연한 인물의 성별 구성을 보면, 남성이 35명(92.1%), 여성이 3명(7.9%)이었다. <표 12>를 보면, 장애인 출연자는 전혀 없었으며, 모든 출연자가 비장애인이었다. 프로그램별로는 <뉴스NIGHT>의 출연자 중 남성 19명(86.4%), 여성 3명(13.6%)이었고, <뉴스와이드>는 남성만 16명(100.0%) 출연했다. 외부인 초청 대담에서의 성별 다양성을 개선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며, 2024년 기준 국내 등록장애인이 전체 인구의 5.1%(보건복지부, 2025)¹⁾인 점을 고려할 때, 방송뉴스에서 장애와 관련된 양적 다양성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다.

1) 보건복지부. (2025, 4월 17일). 2024년 등록장애인 263만 1천 명, 전체 인구 대비 5.1% [보도자료].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

<표 12> 대담 출연자 장애/비장애 분포

구분	뉴스NIGHT	뉴스와이드	전체
장애인	0	0	0
	0.0%	0.0%	0.0%
비장애인	22	16	38
	100.0%	100.0%	100.0%
전체	22	16	38
	100.0%	100.0%	100.0%

2) 질적 공정성

(1) 뉴스 내용 구성방식

제작진의 주관적 개입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살펴본 뉴스 내용 구성방식 항목에서는 전체 뉴스의 0.8%에서만 기자의 주관적 논평이 개입되었다고 평가되었다.

<표 13> 뉴스 내용 구성방식

구분	뉴스NIGHT	뉴스와이드	전체
사건설명	214	98	312
	46.4%	37.8%	43.3%
사건설명+분석	134	91	225
	29.1%	35.1%	31.3%
사건설명+객관적논평	68	36	104
	14.8%	13.9%	14.4%
사건설명+주관적논평	2	4	6
	0.4%	1.5%	0.8%
기타	43	30	73
	9.3%	11.6%	10.1%
전체	461	259	720
	100.0%	100.0%	100.0%

<표 13>을 보면, 객관적 사실을 위주로 구성한 '사건설명'이 312건(43.3%)으로 가장 많았고, '사건설명+분석' 225건(31.3%), '사건설명+객관적논평' 104

건(14.4%), '기타' 73건(10.1%), '사건설명+주관적논평' 6건(0.8%) 순이었다. 프로그램별로는 <뉴스NIGHT>가 '사건설명' 214건(46.4%), '사건설명+분석' 134건(29.1%)이었으며, <뉴스와이드>는 '사건설명' 98건(37.8%), '사건설명+분석' 91건(35.1%)이었다.

(2) 정치 아이템의 논조 편향성

전체 뉴스 아이템 중 정치 주제 뉴스 122건에 대한 편향성 평가²⁾ 결과, 대체로 중립적 아이템 선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를 보면, 정부·여당·여권에 유리한 아이템이라는 평가가 28.7%, 야당·야권에 우호/유리한 보도 아이템이 20.5%로 정부·여당·여권에 유리한 아이템이라는 평가가 근소하게 높게 나왔으나, 특정 정파에 유불리를 따질 수 없는 아이템이라는 의미의 '분류 어려움'이 59건(48.4%)으로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정권교체 시점이 2025년 6월 3일이었음을 고려할 때, 정당의 집권 여부에 따라 우호적인 아이템 선정이 이루어지는 경향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표 14> 뉴스 아이템 편향성 평가 결과

구분	뉴스NIGHT	뉴스와이드	전체
분명하게 정부·여당·여권 우호/유리 또는 야당·야권 비판/불리	11	3	14
	13.9%	7.0%	11.5%
대체로 정부·여당·여권 우호/유리 또는 야당·야권 비판/불리	8	13	21
	10.1%	30.2%	17.2%
분류 어려움	45	14	59
	57.0%	32.6%	48.4%
대체로 야당·야권 우호/유리 또는 정부·여당·여권 비판/불리	4	8	12
	5.1%	18.6%	9.8%
분명하게 야당·야권 우호/유리 또는 정부·여당·여권 비판/불리	11	2	13
	13.9%	4.7%	10.7%

2) 본 항목의 경우에 2025년 6월 3일 대선을 기점으로 뉴스 보도 당시 여당 및 야당을 기준으로 코딩하였다. 이는 정치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 표준적으로 활용되는 '시점별 여야 지위 코딩' 방식으로 지난 대선이 열린 2022년도의 <방송공정성평가보고서>에서도 활용된 바 있는 방법론이다(한국미디어경영학회, 2022)

해당없음(비정치이슈)	0	3	3
	0.0%	7.0%	2.5%
전체	79	43	122
	100.0%	100.0%	100.0%

(3) 뉴스앵커 논조의 편향성

외부인 초청대담 아이템 중 정치주제에 대해서 분석한 뉴스앵커 논조의 편향성 항목에서도 앵커의 정치적 중립성이 잘 지켜졌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표 15>를 보면, 앵커가 객관적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차원에서 발언을 했는지, 주관적인 의견이나 평가를 담은 발언을 했는지 코딩한 결과 앵커의 논조는 19건 전부 '대체로 지식/정보 전달'로 분류되었다.

<표 15> 앵커 논조 공정성

구분		뉴스NIGHT	뉴스와이드	전체
앵커 논조 공정성	대체로 지식/정보 전달	11	8	19
		100.0%	100.0%	100.0%
	대체로 의견/평가 전달	0	0	0
		0.0%	0.0%	0.0%
전체		11	8	19
		100.0%	100.0%	100.0%

(4) 외부인 출연자 논조의 편향성

외부인 초청 대담에서 출연자의 논조를 평가한 결과, <표 16>을 보면, '대체로 의견/평가 전달'이 36건(94.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대체로 지식/정보 전달'은 2건(5.3%)에 불과했다. 외부인 초청대담의 성격상 객관성을 갖춘 제3자의 입장으로 뉴스를 논평/해설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 그리고 외부인 출연자의 소속에서 여야의 편중이 없었으며, 대체로 각 분야의 전문가라는 점을 고려할 때에는 뉴스의 공정성을 훼손한다기보다는 해설과 심층보도의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표 16> 출연자 논조 공정성

구분	뉴스NIGHT	뉴스와이드	전체
대체로 지식/정보 전달	1	1	2
	4.5%	6.3%	5.3%
대체로 의견/평가 전달	21	15	36
	95.5%	93.8%	94.7%
전체	22	16	38
	100.0%	100.0%	100.0%

3) 투명성

취재원 활용의 투명성을 보기 위해 분류한 결과, 투명성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표 17>을 보면, '투명한 취재원'을 제시한 경우가 575건(79.9%)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취재원 제시 없음'은 117건(16.3%), '익명의 취재원'은 28건(3.9%)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별로는 <뉴스NIGHT>가 투명한 취재원 378건(82.0%), <뉴스와이드>가 197건(76.1%)으로 두 프로그램 모두 높은 투명성을 보였다.

<표 17> 취재원 제시 형태별 비중

구분	뉴스NIGHT	뉴스와이드	전체
투명한 취재원	378	197	575
	82.0%	76.1%	79.9%
익명의 취재원	18	10	28
	3.9%	3.9%	3.9%
취재원 제시 없음	65	52	117
	14.1%	20.1%	16.3%
전체	461	259	720
	100.0%	100.0%	100.0%

분석과정에서 기관을 취재원으로 밝힌 경우에는 기관 공식입장임을 의미하는 경우에는 투명 취재원으로, '고위 관계자', '법조인' 등 해당인물을 특정할

수 없는 방식으로 표시된 경우에는 익명으로 분류하였다. 이 기준에 따라, 투명한 취재원을 제시한 575건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표 18>을 보면, '정부 기관'이 107건(18.6%)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검찰' 64건(11.1%), '경찰' 49건(8.5%), '더불어민주당' 42건(7.3%), '국민의힘'과 '일반인 및 시청자'가 각각 36건(6.3%)이었다. 정당소속을 기준으로 볼 때 더불어민주당 소속 취재원이 42명으로 7.3%, 국민의힘 소속이 36명으로 6.3%로 1% 포인트의 근소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이는 실명을 밝힌 취재원을 기준으로 삼은 수치로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민의 힘 소속 의원' 등으로 익명 처리되어 보도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해석해야 한다.

<표 18> 투명한 취재원 유형 분포

구분	뉴스NIGHT	뉴스와이드	전체
대통령실	15	10	25
	4.0%	5.1%	4.3%
정부 기관	75	32	107
	19.8%	16.2%	18.6%
더불어민주당	32	10	42
	8.5%	5.1%	7.3%
국민의힘	21	15	36
	5.6%	7.6%	6.3%
조국혁신당	1	0	1
	0.3%	0.0%	0.2%
개혁신당	1	0	1
	0.3%	0.0%	0.2%
군소정당	1	0	1
	0.3%	0.0%	0.2%
국회	1	1	2
	0.3%	0.5%	0.3%
검찰	48	16	64
	12.7%	8.1%	11.1%
경찰	38	11	49
	10.1%	5.6%	8.5%
법원	27	2	29
	7.1%	1.0%	5.0%
지자체	5	15	20
	1.3%	7.6%	3.5%
전문가	14	17	31
	3.7%	8.6%	5.4%
해당 방송사 독점취재 자료	2	0	2
	0.5%	0.0%	0.3%

해당 방송사 자체분석 자료	1	0	1
	0.3%	0.0%	0.2%
타 국내 언론사 보도	0	0	0
	0.0%	0.0%	0.0%
해외 언론사 보도	6	11	17
	1.6%	5.6%	3.0%
민간 통계자료	4	1	5
	1.1%	0.5%	0.9%
일반인 및 시청자	21	15	36
	5.6%	7.6%	6.3%
시민사회·노동·이익 단체	3	4	7
	0.8%	2.0%	1.2%
외국정부 자료	19	15	34
	5.0%	7.6%	5.9%
해외 민간기관 및 기업체	1	6	7
	0.3%	3.0%	1.2%
북한 정권·기관지·언론매체	0	1	1
	0.0%	0.5%	0.2%
기업체	13	6	19
	3.4%	3.0%	3.3%
국내 문화예술인	23	9	32
	6.1%	4.6%	5.6%
해외 문화예술인	2	0	2
	0.5%	0.0%	0.3%
기타	4	0	4
	1.1%	0.0%	0.7%
전체	378	197	575
	100.0%	100.0%	100.0%

4) 선거보도의 공정성

(1) 선거 보도 내용

21대 대선 관련 보도 25건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표 19>를 보면, '선거유세 스케치'가 14건(56.0%)으로 가장 많았다. '정책·공약 분석'은 6건(24.0%), '선거판세 분석' 3건(12%), 'TV토론' 2건(8%)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별로는 <뉴스NIGHT>에서 선거유세 스케치가 11건(68.8%)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 반면, <뉴스와이드>는 정책·공약 분석이 5건(55.6%)으로 가장 많았다.

<표 19> 대선 관련 보도 아이템 유형

구분	뉴스NIGHT	뉴스와이드	전체
선거판세 분석	2	1	3
	12.5%	11.1%	12.0%
선거전략 분석	0	0	0
	0.0%	0.0%	0.0%
인물분석	0	0	0
	0.0%	0.0%	0.0%
선거유세 스케치	11	3	14
	68.8%	33.3%	56.0%
(예비)후보자 자체 논란	0	0	0
	0.0%	0.0%	0.0%
정책·공약 분석	1	5	6
	6.3%	55.6%	24.0%
투표·개표 현황 및 결과	0	0	0
	0.0%	0.0%	0.0%
선거 일반	0	0	0
	0.0%	0.0%	0.0%
경선갈등	0	0	0
	0.0%	0.0%	0.0%
TV토론	2	0	2
	12.5%	0.0%	8.0%
기타	0	0	0
	0.0%	0.0%	0.0%
전체	16	9	25
	100.0%	100.0%	100.0%

(2) 선거보도 편향성

대선 관련 보도의 편향성을 분석하기 위해 시간배분 및 내용편향성을 분석한 결과, 보도의 편향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표 20>을 보면, 시간배분에서는 여당·여권 비중이 70% 이상인 뉴스가 근소하게 많았으나, 내용 면에서는 특정 정당에 치우치지 않은 ‘분류어려움’으로 분류할 수 있는 뉴스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먼저, 대선 보도 시간배분 편향성에서는 '여당·여권 70% 이상'이 8건(32%)로 가장 많았다. '야당·야권 70% 이상'은 6건(24%), '여야 균형 50%씩'은 5건(20%)이었다. '군소정당 70% 이상'과 '중립·객관 70% 이상'은 각각 2건(8%)씩이었으며, '기타'도 2건(8%)이었다.

<표 20> 대선 보도 시간배분 편향성

구분	뉴스NIGHT	뉴스와이드	전체
여당·여권 70% 이상	5	3	8
	31.3%	33.3%	32.0%
야당·야권 70% 이상	4	2	6
	25.0%	22.2%	24.0%
여야 균형 50%씩	3	2	5
	18.8%	22.2%	20.0%
군소정당 70% 이상	2	0	2
	12.5%	0.0%	8.0%
종립·객관 70% 이상	2	0	2
	12.5%	0.0%	8.0%
기타	0	2	2
	0.0%	22.2%	8.0%
전체	16	9	25
	100.0%	100.0%	100.0%

<표 21> 대선 보도 내용 편향성

구분	뉴스NIGHT	뉴스와이드	전체
분명하게 여당·여권 우호/유리 또는 야당·야권 비판	1	0	1
	6.3%	0.0%	4.0%
대체로 여당·여권 우호/유리 또는 야당·야권 비판	1	0	1
	6.3%	0.0%	4.0%
분류 어려움	11	7	18
	68.8%	77.8%	72.0%
대체로 야당·야권 우호/유리 또는 여당·여권 비판	2	2	4
	12.5%	22.2%	16.0%
분명하게 야당·야권 우호/유리 또는 여당·여권 비판	1	0	1
	6.3%	0.0%	4.0%
전체	16	9	25
	100.0%	100.0%	100.0%

대선 관련 보도의 내용 편향성을 평가한 결과, <표 21>을 보면, '분류 어려움'이 18건(72%)으로 가장 많았다. '대체로 야당·야권 우호/유리 또는 여당·여권 비판'은 4건(16.0%)이었으며, '분명하게 여당·여권 우호/유리 또는 야당·야권 비판', '대체로 여당·여권 우호/유리 또는 야당·야권 비판', '분명하게 야당·야권 우호/유리 또는 여당·여권 비판'은 각각 1건(4%)씩으로 나타났다. 대선 국면에서 야당 및 야권에 우호적인 보도가 소폭 이루어졌지만, 계엄 및 탄핵정

국 기간에 대해 분석이 이루어졌음을 고려하면 유의미한 차이라고 해석하기 어렵다.

2. 시사교양 부문

1) 양적 평가

(1) <팩트추적> 아이템 유형

팩트추적 프로그램의 뉴스 아이템 38건을 주제별로 분석한 결과, <표 22>를 보면, 다양한 주제들이 골고루 다루어졌음을 확인했다. '사회'가 10건(26.3%)으로 가장 많았고, '경제'는 5건(13.2%), 'IT·정보통신'은 4건(10.5%)이었으며, '국내정치', '노동', '보건/질병'은 각 3건(7.9%)씩이었다. 시사교양 프로그램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나 정치 분야의 아이템 비중이 높은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아이템 분포 차원에서 IT, 정보통신 소재가 4건 방영된 것에 비해 외교, 국방, 교육, 젠더, 스포츠에 관한 주제가 한 건도 기획되지 않아, 아이템의 다양성이 더 확대될 여지가 있음을 보여준다.

<표 22> 프로그램 주제 아이템 유형

구분	빈도	비중
국내정치	3	7.9%
선거일반	0	0.0%
21대 대선	2	5.3%
중앙행정	0	0.0%
외교	0	0.0%
북한(통일)	0	0.0%
국방	0	0.0%
지역	1	2.6%
경제	5	13.2%
법원	2	5.3%
검찰	0	0.0%
치안	1	2.6%
사회	10	26.3%
교육	0	0.0%

노동	3	7.9%
환경	1	2.6%
보건/질병	3	7.9%
복지	1	2.6%
젠더	0	0.0%
방송·문화예술	1	2.6%
IT, 정보통신	4	10.5%
스포츠	0	0.0%
생활	0	0.0%
해외/국제	1	2.6%
전체	38	100.0%

(2) <팩트추적> 취약계층 관련성

<팩트추적> 프로그램 38건 중 취약계층 관련 보도를 분석한 결과, 취약계층을 직접적으로 조명한 편수는 전체 편수 대비 낮은 비중을 차지했다. <표 23>을 보면, '해당 없음'이 30건(78.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기타'는 3건(7.9%), '고령층' 및 '경제적 취약계층' 각2건(5.3%)씩이었으며, '아동·청소년'은 1건(2.6%)으로 나타났다.

<표 23> 취약계층(사회적 소수자) 관련성

구분	빈도	비중
해당 없음	30	78.9%
경제적 취약계층	2	5.3%
장애인	0	0.0%
고령층	2	5.3%
아동·청소년	1	2.6%
성평등/성소수자	0	0.0%
다문화 및 이주민	0	0.0%
기타	3	7.9%
전체	38	100.0%

<팩트추적>은 사회적인 의제를 주도해나가는 시사교양 프로그램으로써 2025

년에 차별금지법이나 장애인 이동권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나 성평등/성소수자, 다문화 및 이주민에 대한 아이템이 포함되지 않아, 사회적으로 대변해야하는 취약계층의 대상을 경제적 취약성을 넘어서 보다 넓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팩트추적 프로그램의 보도 프레임을 분석한 결과, <표 24>를 보면, '갈등제시중심'이 17건(44.7%)으로 가장 많았다. '혼합/불분명'은 11건(28.9%), '문제해결중심'은 10건(26.3%)으로 나타났다.

<표 24> 프레임

구분	팩트추적
갈등제시중심	17
	44.7%
문제해결중심	10
	26.3%
혼합/불분명	11
	28.9%
전체	38
	100.0%

2) 질적 평가

(1) 아이템 선정 및 접근방식의 적절성

전문가들은 대체로 <팩트추적>의 아이템 선정이 전반적으로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팩트추적>이 주요 현안을 단순한 '사건' 단위로 소비하지 않고 불평등, 재난, 정치 과정 등을 “구조적·제도적 문제로 묶어 다루려는 기획 의도를 견지하고 있다(전문가B)”고 본 것이다. 전체적인 아이템 구성이 “정치, 사회, 문화, 일상생활의 영역에서 이슈의 중심이 되는 문제(비상계엄, 트럼프, AI, 위고비, K-pop 등)와 덜 조명된 문제(청소년 자살, 안전 및 건강 불평등 등)를 고루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전문가A, 전문가F)”는 의견이 있었으며, 종합적으로 “탐사보도/시사교양 프로그램이 수행해야 할 공적 책무(의제 설정, 권력·제도 감시, 취약계층 조명, 시민의 정보 접근권 보장)와 비교적 높은 정합성을 가진다(전문가B)”고 분석하였다.

한편, 정치·사회적 이슈의 이슈에 비해 경제, 문화, 기술, 의료, 외교, 환경/기후 이슈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게 다루진다는 면에서 “언론이 정치, 사회 이외의 다양한 분야에도 관심을 기울여준다면 국민의 관심을 다양한 분야로 유도하여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할 것(전문가C)”이라고 제언하였다.

(2) 상반된 의견을 다루는 균형성

상반된 의견을 다루는 균형성에 대해서는 아이템 주제에 따라 정치 이슈인 <대선 공약 점검> 편 등에서는 주요 후보자들의 의견과 시간을 “양적·시각적으로 균형 있게 배분”하여 적절한 균형감을 유지하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던 반면, 비정치적 이슈(건강 불평등, 산재 등)에서는 실질적 균형을 이루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전문가 A,B,D,F).

정치적 의제에서는 의견과 시각적인 요소 모두에서 양적인 균형이 이루어졌다고 보이지만, 비정치적 이슈에서는 개선을 요구하는 측의 입장에 비해 개선의 책임을 진 입장에서 의견은 비중이 적게 다루어진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나타났다. 의견과 내용의 균형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피해자의 입장을 다각도에서 반복적으로 다루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왜 그런 문제를 유발하였는지, 혹은 그럴 수 밖에 없었는지 등을 해결할 당사자의 입을 통해 들을 수 있도록, 만약 당사자의 의견 확보나 인터뷰 확보가 어렵다면, 전문가를 통해서라도 반대편의 의견을 담는 시도가 필요(전문가C,F)” 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3) 취재의 공정성

전문가들은 <팩트추적>이 취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주요 공약에서 제시되는 대조적 관점을 각기 다른 입장을 지닌 이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편향성을 제거하려 했던 점에서 공정한 관점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전문가A)”는 의견과 함께, “이해관계자/기관/전문가를 함께 세팅”하고 “반론권/해명 반영 시도”를 드러냄으로써 “절차적 공정성을 비교적 확보한 편(전문가B)”이라는 분석이 있었다. 또한 “사회적 약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를 해결할 힘이나 지식이 없는 상황을 널리 알려서 간접적으로 이들을 돕고, 향후 또 다른 피해자를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전문가C)”고 평가하였다.

한편, 공정성 강화를 위한 보완점도 제기되었다.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듣지 못한다면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유까지 제대로 설명되면 좋겠다. 가령 노숙인, 산업 재해의 사측 등 (전문가A)”이라는 의견과 함께, “사측의 반론권이나 해명 기회 등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고, 이들이 취재를 거부하더라도 ‘입장을 요청했음에도 답변이 오지 않았다’와 같이 취재 과정에서의 공정성 노력을 부각할 필요가 있다(전문가D)”는 점을 강조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시사 다큐의 공정성은 무엇보다 핵심 주장에 대한 교차 검증, 그리고 프로그램 내에서 제기된 의혹이나 비판 대상자에게 충분한 반론권을 주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대선 공약’ 아이টে에서 주요 3명 후보자의 공약을 검증 없이 CG와 자막을 통해 단순 나열하고 소개하는 구성에 그쳤다는 점을 비판하며 충분한 교차검증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더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4) 진술과 증거의 객관성

<팩트추적>은 객관성을 담보하고 증거를 다원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예산 자료나 과거 통계 수치, 혹은 분석 자료를 그래픽으로 제시하거나 대안 제시에 있어서 해당 법조문을 자막으로 제시하는 등 진술과 증거의 객관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전문가D,F)”는 의견이 있었으며, “단일 출처가 아니라 통계/공문·제도 문서/현장 취재/당사자 증언/전문가 인터뷰처럼 성격이 다른 근거를 섞어 배치하려는, 증거의 다원화 시도(전문가B)”가 확인된다고 분석하였다.

한편, 전문가 인터뷰에서 객관성 강화를 위한 보완점도 언급되었다. “통계·공문 같은 1차 자료와, 증언·인터뷰 같은 질적 자료는 정보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무엇이 핵심 근거이고, 무엇이 보조 근거인지'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으면 객관성의 견고함이 약해질 수 있다(전문가B)”는 분석과 함께, “프로그램의 독자적이고 심층적인 추가 취재를 통해 사실 검증은 물론 반증의 가능성을 제시하여 내면적인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전문가E)”는 제언이 있었다.

(5)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도

<팩트추적>이 사회적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조명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

와 아직 부족하다는 부정적 평가가 공존했다. “아이템 선정 측면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전문가D)”는 평가와 함께, “외국인, 저소득층, 고령자, 장애인 등에 대한 내용이 많고, 이들의 입장과 의견을 전달해주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전달하는 것은 사회 전체적인 소통과 화합에 기여할 것(전문가C)”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그와 함께 연간 다룬 아이템을 통해서 볼 때 직접적으로 취약계층을 다룬 아이템의 비중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었다(전문가F).

한편, 취약계층 보도에 있어 주의가 필요한 부분도 지적되었다. 취약계층이 자주 '피해자'의 모습으로만 등장하면, 의도와 무관하게 무력함·의존성·타자성이 강화될 수 있으며, 동정은 편견의 다른 얼굴이기도 하다는 우려도 있었다(전문가B, 전문가F). 예시로, 취약계층의 건강 문제를 다룰 때 “그들의 감염을 막는 것이 공동체의 안정과 건강에 기여한다”는 수단적 논리보다는 “인권 보호, 모두가 지닌 건강권에 대한 논의가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이 적절한 순서(전문가A)”라는 제언이 있었다.

(6) 공적책임과 공정성 강화를 위한 개선점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팩트 확인에 그치지 않고 후속 추적과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대개의 논의가 과거에 벌어진 사건인 만큼, 현재 후속 논의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이를 정확하게 '팩트추적'했으면 좋겠다. 과거의 사건과 팩트의 일부만 나열하는 것은 여타 프로그램과 변별점을 갖기 어렵다(전문가A)”는 의견과 함께, “개선 약속(정부/기업/정당) → 이행 여부 → 지표 변화를 추적하는 후속 검증 프레임을 몇 개 축으로 고정해 운영하면, 프로그램의 공적 책무(책임추궁, 제도 감시, 사회적 학습 촉진)가 더 선명해질 것(전문가B)”이라는 제안이 있었다.

또한, 사회 이슈에 대한 회차들에서는 해결책 제시가 대체로 정책 또는 법제의 미흡함으로 마무리되어 있고, 따라서 국가적 규제의 필요성이 강조된다는 방향으로 전개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시청자들이 문제의 해결책으로 ‘국가의 규제’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게 할 우려가 있어, 해결책 제시 면에서 다양한 관점의 대안을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전문가F).

편성 및 제작 방식에 대한 개선 의견도 제시되었다. “현재 본방 편성시간이 매주 수요일 밤 11시 20분인데, 경쟁 프로그램인 <추적 60분>(KBS)이나 <PD 수첩>(MBC)의 방영시간대가 10시대임을 감안해 볼 때, 프라임 시간대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전문가D)”는 의견과 함께, “기존 뉴스 자료화면이나 인터뷰, 내레이션 중심의 구성 방식에서 벗어나 핵심 쟁점에 대한 새로운 맥락과 관점, 이해 당사자에 대한 폭넓고 심층적인 단독 취재를 통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해야 한다(전문가E)”는 제언이 있었다.

V. 결론 : 분석결과의 함의와 공정성 개선방안

1. 분석결과의 함의

1) 공정성 진단의 분석틀 제시

본 연구는 양적 공정성, 질적 공정성, 투명성을 핵심 축으로 삼아 YTN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공적책임 수행을 진단하는 분석틀을 제시했다. 양적 공정성은 정치적 성향의 단순한 균형을 넘어 보도 영역과 주제 배분, 출연자 구성, 소수자와 취약계층의 반영 여부까지 포괄하며, 질적 공정성은 보도가 사실 전달과 해석·평가 중 어느 지점에 중점을 두는지, 정보와 의견이 적절히 구분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아울러 투명성은 취재원 공개, 정보 출처와 조사 방식의 명시 등 보도의 신뢰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요소로 설정되었으며, 이러한 종합적 분석틀은 2025년 보도 성과를 평가함과 동시에 향후 보도전문채널이 변화하는 정치·사회 환경 속에서 공정성과 공적책임을 제도화되고 지속 강화해 나가기 위한 실천적 기준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2025년의 정치·사회적 격변이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보도전문채널이 수행해야 할 공적책임과 공정성의 의미를 재확인하고, YTN 시사·보도 프로그램이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해 왔는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였다.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 사회적 갈등의 심화, 국제질서의 불확실성 증대는 보도에서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의 정확성·균형성·책임성을 요구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보도전문채널은 민주적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공론장으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론적 검토를 통해 본 연구는 방송법이 규정한 공적책임과 공정성을 준거로 삼아,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공정성이 단일 기준으로 환원될 수 없으며 객관성·균형성·다양성·투명성 등 복합적 요소의 결합을 통해 구현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공정성은 단순한 양적 균등을 넘어 사안의 맥락과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한 실질적 균형을 의미하며, 질적 공정성과 투명성은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보도의 신뢰성과 공적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조건임을 결론적으로 확인하였다.

2) 공정성 분석결과의 함의

(1) 양적 공정성

YTN 보도 프로그램의 양적 공정성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정치적 중립성 면에서는 대체로 균형이 유지되고 있었다. 뉴스 아이템의 다양성 면에서는 모든 주제들을 골고루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국내정치 뉴스의 비중이 높은 것에 반해 지역, 복지, 환경 등 사회적 가치와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아이템의 비중이 낮았다는 점도 파악할 수 있었다.

두 번째로 출연자와 게스트의 성별 비율 등 포용적인 다양성의 차원에서도 외부인 초청 대담 출연자의 대다수가 남성인 상황, 그리고 수집된 샘플에서 장애인 출연자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다.

이 같은 경향은 시사교양 프로그램인 <팩트추적>에서도 아이템 선정에 있어서 취약계층을 다룬 아이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면에서 유사하게 나타났다. 보도 프로그램과 시사교양 프로그램에서 공통으로 연령, 성별, 경제적 계층 등 다양한 차원에서의 소수자의 권익 실현을 위한 취재 풍토 마련에 보다 관심을 기울이는 노력이 필요해 보이는 지점이다.

(2) 질적 공정성

질적 측면에서는 보도의 중립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보이거나, 갈등 중심의 프레임 구성은 한계로 지적된다. 정치관련 뉴스 및 21대 대선 관련보도에서 명시적인 정파성을 띄지 않고 형식적 중립을 지키려는 노력이 돋보였다. 하지만, 뉴스 프로그램에서 심층보도의 비중이 적었다는 면에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맥락과 해설을 곁들인 보도의 비중을 늘릴 수 있는 구조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팩트추적> 프로그램의 경우 ‘갈등제시중심’ 회차의 비중이 ‘문제해결중심’ 회차의 약 2배로 나타난 바, 단순한 갈등 노출보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대안을 제시하는 공익적 저널리즘으로의 질적 전환이 필요하다.

(3) 투명성

취재의 신뢰도를 결정짓는 투명성 지표는 전반적으로 우수한 수준을 기록했다. 하지만, 투명한 취재원의 유형을 보면 '정부 기관', '검찰' 등 공식 권력 기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는 면에서 전문가나 일반 시민 및 시청자의 의견 반영 비중을 높여 취재원의 다원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결론적으로, YTN 뉴스 및 시사교양 프로그램은 취재원의 투명성과 정치적 중립성 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으나, 성별·장애 여부 등에서 출연진의 다양성 부족과 소외 계층 및 지역 관련 보도 면에서는 구조적인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2. 공정성 개선방안

앞선 이론적 논의와 양적, 질적 분석에 기초해서 YTN이 보도전문채널로서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공적책임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향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1) 뉴스아이템 및 취재원 섭외의 다양성 확보

현재 권력 감시나 정치적 사안에 보도자원이 집중되어있는 상황에서 수용자의 폭넓은 관심을 반영하고, 지역 사회의 균형발전에 기여해야하는 방송의 공익적 책무에 기여하기 위한 다양성 확보를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생활, 환경, 지역 이슈 등 다양한 시청자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아이템을 발굴하고, 이들의 목소리가 뉴스에 반영될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2) 형식적 중립성과 심층보도 사이의 균형 마련

전반적으로 정치 분야 뉴스의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보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형식적 중립성이 중시되고, 이를 수호하기 위하여 의견/평가보다는 사실 및 정보에 기반한 뉴스를 제작하는 풍토가 긍정적으로 여겨지지만, 전문가나 일반 시민의 균형있는 참여를 통해 사회적 갈등의 맥락을 짚어내고 해결

책을 도출할수 있는 방식과 병립할 수 있는 뉴스 형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3) 취약계층 및 사회적 소수자 이익 수호

방송의 공정성을 구성하는 공익성(Public Interest), 공정성(Fairness), 다양성(Diversity)의 가치 중에서 공익성과 다양성 차원에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외부인 대담 초청자의 성별 다양성, 장애인의 포용적 재현에 관한 것이 이에 해당될 것이다. 장애인이 전체 인구의 5.1%(보건복지부, 2025)인 상황에서 장애인 출연자가 수집된 샘플에서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은 점은 물론 뉴스 바깥의 한국사회의 구조적 차별에 기인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선제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포용적 재현을 통해 사회적인 이해의 폭을 넓혀갈 수 있는 공익적 책무에 대한 조직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4) 시사교양 프로그램의 아이템의 다원화

시사교양 프로그램에서 아이템 구성이 현재도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지만, 그 비중에 있어서 정치·사회적 이슈가 경제, 문화, 기술, 의료 등의 기타 분야들보다 많다는 의견도 있어(전문가A, 전문가C), 아이템의 확장과 다원화에 보다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

(5) 시사교양 프로그램의 비정치적 아이템에서 형식적 균형성 강화

시사교양 프로그램에서 입장이 다른 양측 의견들의 형식적 균형성이 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프로그램의 취지와 방향대로 구성되면 설득력이 강하고 시청의 흐름이 매끄럽지만, 갈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대립적 의견을 보다 균형감 있게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다(전문가B, 전문가C). 정치적 아이템을 다룬 회차에서는 형식적 균형감이 좋았다고 평가된 반면(전문가A, 전문가B, 전문가C, 전문가D), 비정치적 아이템을 다룰 때는 기획의도에 맞는 인터뷰의 비중을 크게 하여 좋은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다소 과장되게 표현된 면이 있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지적되었다(전문가C, 전문가D). 시사프로그램의 기획의도는 명확히 제시하더라도, 비중있는 대립적 의견들을 시청자가 균형감 있게 접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

(6) 시사 프로그램에서 사회적 현안의 대안제시

<팩트추적>에 국한하여 전문가 심층인터뷰를 진행한 결과를 보면, 전문가들은 프로그램의 제목과 취지에 맞게 팩트를 확인하는 데만 그치기보다는 사회적 현안문제들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이나 대안에 대한 논의가 추가되거나 현안 문제들의 후속적 취재 혹은 연속적 기획 등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주었다(전문가A, 전문가B, 전문가D, 전문가F).

(7) 팩트 검증의 프로토콜 제시

팩트 검증의 방법이 사안마다 차이가 있다보니 회차마다 인터뷰, 통계자료, 사례제시 등 다른 방식의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포괄하는 검증의 프로토콜을 마련하여 프로그램 끝이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이 의미있을 것으로 본다. 검증의 프로토콜이라 함은 예를 들어, 1차 자료 검증, 교차 검증, 반론권 절차고지, 한계점이나 불확실성 여부 고지 등을 프로세스를 의미한다(전문가B).

(8) 시사 프로그램 논조에서 보편적 당위성의 선행

시사 프로그램에서 아이템의 주제에 집중하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보다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당위성으로부터 출발하는 접근방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예를 들면, <감염병 역습의 그림자, 건강 불평등>에서 감염병 취약계층의 문제를 다루면서 그들의 감염을 막는 것이 공동체 건강에 기여한다고 먼저 강조하고 있는데, 그보다는 모든 인간의 건강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전문가A). 시사 프로그램에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현안문제를 강조하면서 해당 쟁점에 집중하면서 생기기 쉬운 문제인데, 보다 보편적이고 당위적인 논리가 선행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참고문헌

- 강태영 (2004). “텔레비전 보도와 공정성 기준”. 텔레비전 저널리즘 공정성과 정치 세미나 발제문, 한국방송학회.
- 강태영·권영설 (2000). “방송의 공정성에 관한 연구”. 방송위원회.
- 김진웅 (2008). “지상파 방송의 공적 책무: KBS, MBC, SBS를 중심으로”. <미디어와 공연예술 연구>, 제3권, 35-64.
- 배진아 (2007).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성”. <방송통신연구>, 통권 제64호, 74-101.
- 백미숙 (2004). “미국 라디오 방송 제도의 성립과 공익 개념의 형성, 1922~26”, <한국언론학보>, 48(2), 373-399.
- 송영주, 김하나, 박진우 (2022). “공영방송의 책무성 메커니즘에 대한 평가 모델 : 관계적 관점에서 프랑스 공영방송의 책무성에 관하여”, <방송통신연구>, 통권 제118호, 75-106.
- 심훈 (2014). “한국 공영방송의 공정보도에 대한 인식 평가”,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제66호, 110-132.
- 이민웅 (1996). “한국 TV저널리즘의 이해”, 나남.
- 이종혁, 정낙원, 김세은 (2017). “선거방송의 평가 기준과 실제”, <방송통신연구>, 통권 제97호, 129-163.
- 이정훈·정준희 (2018). “공영방송 저널리즘의 신뢰성 회복을 위한 고찰”, 한국언론정보학회 학술대회, 3-14.
- 정연우 (2020). “방송의 어카운터빌리티와 내적 자유의 제도화에 관한 연구”, <미디어와 인격권>, 6(1), 235-272.
- 정윤식(2005). “유료방송의 공익 및 공적 책임”,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16, 45-81.
- 조소영 (2019). “방송법 개정 관련 법안들에 대한 법적 검토”, <언론과법>, 18(1), 37-70.
- 조항제 (2019). “한국 언론의 공정성-이론적 구성”, 컬처룩.
- 차승민 (2004). “방송의 자유의 제한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45(1), 131-150.

한국미디어경영학회 (2022). “TV조선 뉴스프로그램 공정성 연구: KBS1TV, MBC 메인뉴스 비교를 중심으로”. 연구보고서.

한국방송학회 (2025). “2024년 YTN 시사보도 프로그램 공정성 진단 연구”. 연구보고서,

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5두49474 전원합의체 판결.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Landis, J. R., & Koch, G. G. (1977). The measurement of observer agreement for categorical data. *Biometrics*, 33(1), 159-174. <https://doi.org/10.2307/2529310>.

부록1: 전문가 인터뷰 질문지

<팩트추적>의 공적책임과 공정성에 관한 심층 인터뷰 질문지

보도전문채널 YTN의 시사교양 프로그램 <팩트추적>은 탐사보도의 형식을 통해 다양한 사회 현안과 구조적 문제를 심층적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이 프로그램의 공적책임과 공정성을 진단하는 취지로 YTN의 의뢰로 한국방송학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연구의 일환으로 전문가 심층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문지와 함께 제공된 <팩트추적>을 시청하시고, 다음에 제시된 문항들에 의견을 주십시오. 보내주신 의견은 본 연구에만 국한해서 익명으로 활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연구책임자 서울여자대학교 임정수

2025년 팩트추적 아이템 목록 질문문항 뒤페이지에 첨부됨.

다음 세 편의 샘플 링크(정치적 이슈 1편과 사회적 이슈 2편)를 응답 편의를 위해서 참고로 드립니다. 이외 다른 회차를 참고하셔도 됩니다(www.ytn.co.kr/replay).

선거(5월) 1편 영상링크

건강불평등(3월) 1편 영상링크

산재 (10월) 1편 영상링크

1. <팩트추적>의 아이템 선정의 적절성은 어떠하다고 평가하십니까?

(질문문항 뒤에 첨부된 아이템 목록 참고)

2. <팩트추적>이 해당 이슈와 관련한 상반된 의견들을 다루는 균형성은 어떠하다고 평가하십니까?

3. <팩트추적>이 수행한 취재의 공정성은 어떠하다고 평가하십니까?
4. <팩트추적>이 제시한 진술과 증거의 객관성은 어떠하다고 평가하십니까?
5. <팩트추적>이 사회적 취약계층(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 노숙자, 난민 등)을 편견없이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떠하다고 평가하십니까?
6. <팩트추적>의 공적책임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팩트추적 2025년 방송 내역>

방송 일자	회차	아이템
2025.0101(수)	25	〈신년기획〉 지도 위의 ‘행복 격차’ 소멸의 현장: 남은 사람들의 이야기
2025.0108(수)	26	〈신년기획〉 지도 위의 ‘행복 격차’ 사라진 버스 노선과 강남 공화국
2025.0118(토)	27	비극과 미궁, 여객기 참사 ‘미스터리’
2025.0122(수)	28	트럼프 2.0 시대…“위기를 기회로”
2025.0129(수)	29	“살 빠려다 마약류 중독”…다이어트약의 위험한 유혹
2025.0205(수)	30	고령화 해법 vs 갈등의 불씨…‘정년 연장’의 딜레마
2025.0212(수)	31	거짓으로 클릭 장사, ‘가짜정보 비즈니스’
2025.0219(수)	32	그날의 ‘헌법’, 내일을 묻다
2025.0226(수)	33	파면과 복귀의 갈림길…‘尹 탄핵 심판’ 결론은?
2025.0305(수)	34	분열과 혐오도 ‘맞춤 배달’…‘추천 알고리즘’의 덫
2025.0312(수)	35	감염병 역습의 그림자, ‘건강 불평등’
2025.0409(수)	36	‘계엄 선포에서 파면까지’, 숨 가뼀던 그날의 기록
2025.0416(수)	37	방심이 부른 ‘괴물 산불’…“모든 걸 앗아갔다”
2025.0423(수)	38	‘마지막 이별’ 조차 사치가 된 시대
2025.0507(수)	39	“무료라더니 슬쩍 결제”…눈속임 상술 ‘다크패턴’
2025.0521(수)	40	〈선택 2025, 약속의 무게〉 대선 공약 집중 점검 I
2025.0528(수)	41	〈선택 2025, 약속의 무게〉 대선 공약 집중 점검 II
2025.0611(수)	42	〈선택 2025, 약속의 무게〉 희망의 첫걸음, 새 대통령에게 바란다
2025.0618(수)	43	〈6·25 전쟁 75주년 연속기획〉 사라진 흔적, 남겨진 이야기 I
2025.0625(수)	44	〈6·25 전쟁 75주년 연속기획〉 사라진 흔적, 남겨진 이야기 II
2025.0702(수)	45	AI 시대, 공존의 길을 묻다
2025.0716(토)	46	유출된 정보, 누가 당신을 노리는가?

방송 일자	회차	아이템
2025.0723(수)	47	여름의 유혹, 안전의 빈틈
2025.0806(수)	48	위기의 자영업 가맹점주들...본사는 호황 중?
2025.0813(수)	49	조합원의 무너진 꿈_지역주택조합의 민낯
2025.0827(수)	50	“우리 아이가 위험하다”...청소년 자살률 '빨간불'
2025.0903(수)	51	불붙은 주 4.5일제 논의...우리의 방향은?
2025.0917(수)	52	비만인들의 희망 '위고비 매직'의 명과 암
2025.0924(수)	53	텅 빈 집, 대한민국을 좀먹다
2025.1008(수)	54	(추석 연휴) 노인들은 암표로 야구를 본다 '디지털 격차'
2025.1015(수)	55	헌옷, 누가 입고 어디로 사라지나'
2025.1022(수)	56-	반복되는 일터 속 죽음...‘산재공화국’ 오명 벗을까
2025.1105(수)	57	배달앱, 편리함의 이면...누가 대가 치르나?
2025.1122(토)	58	국경을 넘은 온라인 사기...남은 숙제는?
2025.1126(수)	59	부동산 신규 아파트 하자보수 문제
2025.1203(수)	60	비상 계엄 1년, 민주주의를 다시 묻다
2025.1210(수)	61	K-열풍, 열광과 이면
2025.1217(수)	62	〈2025년 연말특집 2부작〉 AI의 빛
2025.1224(수)	63	〈2025년 연말특집 2부작〉 AI의 어둠 (방송 예정)